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04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안 연구

이성재 장성화 한국환

J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04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안 연구

이성재 장성화 한국환

jthink 전북연구원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이성재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공 동 연 구	장성화	연구위원	제2장 2절
	한국환	전문연구원	제2장 3절, 3장 1절
자 문 위 원	백금철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처장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센터장	

연구관리 코드 : 20JU3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 개요

❍ 자치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 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단위의 점적인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역에서 수립하는 농촌협약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에 대응해 도내 시군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시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검토하여 세부 작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농촌협약 지구 및 전북 추진 현황

❍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선정 공모 및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2020년 6월 시범도입 시군(9개소)과 예비도입 시군(3개소)를 선정함

❍ 2021년부터 본격적인 농촌협약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확대 시행함(대상지구 17개소, 예비지구 3개소)

- 전라북도의 농촌협약은 2020년에 시범지구로 임실군과 순창군 2개소가 선정되고, ′2021년에 대상지구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3개소가 선정됨

- ′22년 대상지구 공모는 ′21년에 신청했던 남원시, 장수군, 부안군과 신규로 계획중인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등 총 7개소가 준비중임

❍ 주요 개선 과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세부 목차에서 체크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검토함

- 농촌공간 전략계획상의 주요 검토항목은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계획의 기본방향, 농촌생활권발전계획, 투자 및 관리·운영 계획이며,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의 주요 검토항목은 기본구상, 사업계획, 이행관리 및 성과관리 계획 등임

3. 농촌협약 계획 대응 방안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 (배경 및 목적) 배경은 정책 및 지역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목적은 비전 및 목표와 연계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강조하여 작성

❍ (계획수립 체계)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 내 주체들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시하고, 획수립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을 실행·지원 기구, 협의기구, 의결기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표와 모식도 표현

❍ (자연·지리 현황) 광역적 입지를 표현하고, 도로망은 행정구역 주변의 광역교통망이 나타나도록 작성, 단순한 지형·지세 분포 설명은 지양하고, 산맥, 산림 등이 생활권 형성에 미치는 지역만의 특성 등 공간구조 중심으로 기술, 자연·지리 부문의 특성을 정리하고 생활권 형성 등과 관련된 공간구조 요약

❍ (인문·사회 현황) 인구분석은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밀도, 인구이동 등을 분석해 인구위기 현황 및 추이를 도면에 표기, 읍면별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인구전망에 따른 설명 기술, 토지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취락지구, 토지이용계획시설 등을 종합도면으로 표현

❍ (산업·경제) 지역내 총생산은 산업별(1차/2차/3차, 농림어업/건설업/광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분석하고, 사업체 및 종사자는 읍면동별 변화추이 분석(지역총생산 증감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성장산업 도출)

❍ (문화·관광) 자연·역사문화 자산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자원개발이 양호한 대상과 발전잠재력이 높지만 자원화가 미흡한 대상을 구분, 관광수요는 시군 내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 계절적 분포, 내·외부 관광객, 방문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 (사회간접자본) 최근들어 빈집이 증가하는 읍면과 빈집이 밀집된 지역 분석, 건축물 노후도 및 빈집 현황 등을 중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도출

○ (도로 및 교통) 농산어촌 및 오지마을 교통 현황 , 지자체 내부 중심 생활지역과 배후마을과의 교통 현황,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인접 시군 중심 생활지역과의 교통체계 등을 분석

○ (지역공동체 및 인적 현황) 지역 공동체의 단순 현황 등 개요 정리보다는 지역 내에서 기능과 역할, 운영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내용, 방식, 빈도, 수혜범위 등을 조사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방향 검토, 인적자원은 농촌에서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별 축 및 거점지구)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시도종합계획 등), 일반현황(자연·인문산업·사회간접시설 등), 생활서비스 공급·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능 축, 기능별 거점 및 거점지구를 종합적으로 제시

○ (생활 SOC 분포) 군 전체 및 읍면별로 11개 서비스 기능시설의 세부항목(고차·(중차)·저차)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제시, 서비스 기능시설 분석시 시설 수 기준 외에 인구대비 시설 수 기준 검토

○ (중심지 계층 및 기능 분석) 중심성 분석 후 지수가 높게 도출된 읍면에 대한 특성과 원인 등을 설명하고, 계층에 따른 읍면별 인구규모 제시 및 인구규모에 따른 중심성 비교

○ (주민생활권 분석) 지역별(읍면 자체, 관내 읍면간, 타 시군간), 주간대별(주중, 주말), 연령대별(비중 높은 연령대), 년도별(최근 3개년)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동현황에 대한 특성과 원인을 연계구조 및 생활권 형성 측면에서 설명

○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종합분석과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들의 특징 및 원인 설명(공간·지리적 특징, 도로교통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능이 필요한 지역과 수요가 높은 계층 등을 도출

○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생활서비스시설 이용률을 읍면별·시설별(보육·교육·복지·문화 등)·서비스 위계별(고·중·저)로 구분하여 산출, 통행패턴 결과(모바일 이동데이터 등)와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결과를 비교(읍면별 이동, 타 시군 이동)하여 생활권 형성 검토

○ (생활서비스 중요도·만족도) 읍면별 생활서비스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중점개선 분야(중요도高, 만족도低)를 서비스 위계(고·중·저)별로 분석하고, 중점개선 분야의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지역과 함께 제시, 365생활권 측면에서 읍면별·기능별 보완·개선이 필요하거나 과잉된 서비스 등 지역의 특징 설명

○ (정책수요 조사·분석)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는 생활권별·부문별 문제점 및 정책수요 정리 → 대응전략 → 우선과제 도출로 연계되는 논리 체계 형성

-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우위유지영역 내 기능은 하위거점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영역 내 기능은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거점기능 강화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상위계획, 계층분석, 생활서비스 이용, 인구이동 등에 따라 나타난 각각의 권역을 활용 또는 중첩시켜 연계구조 도출하고, 기능별 거점 및 거점지구 등을 고려한 농촌공간구조상의 문제점 분석,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농촌공간구상(비전 및 목표 등)을 고려한 논리적 연계 강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지역공동체활성화 측면에서 개선방향 제시

○ (농촌공간 구상) 기능별 축은 지역 내 주요자원과 상위계획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적 형태로 연속 또는 연속될 잠재력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설정, 거점권역은 유사한 기능이 집적되거나 미래 핵심공간 기능이 가능한 지역·자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정, 생활권 설정은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상위계획, 중심지 계층, 모바일 이동, 생활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프로세스 제시

○ (생활권발전계획) 생활권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에 기반한 비전-목표-전략 체계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 제시, 상위거점과 연계되는 중·하위 거점의 기능 확충(시설개선·확충) 방안과 생활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및 배후마을로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제시

○ (거버넌스 구성·운영) 각 주체별 인력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계획 등 운영방안을 명시하고 주체간 기능적 연계방안 제시, 립체계 구축을 위한 주역주민 역량강화, 현장

활동가·민간전문가 육성, 지역·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

❍ (성과관리 계획) 목표별·부문별(인구사회, 생활환경, 농촌공간 등) 정량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제시(체크리스트, 관련부서 업무 협조체계, 중간지원조직 활용, 환류체계 등), 모니터링은 농촌개발사업 예산분석 모니터링, 사업 실적관리, 시설물 사후관리, 전문인력 육성·관리, 홍보·마케팅의 정기·수시 모니터링, 부진지구 활성화 계획 등을 중심으로 검토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 (비전 및 목표) 농촌공간 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구체성 고려, 생활권의 주요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과 연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전략 및 과제) 목표별 전략과 필요시 공간별(읍면별 또는 거점 위계별) 전략 제시, 거점별(상위·중간·기초)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과제 제시

- 주요 고려사항 : 거점별 기능 강화, 거점 간 연계 활성화,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생활권 거버넌스 강화 등

❍ (사업선정) 거점별 기 추진사업을 검토하고, 목표~(현황 및 개선방향)~추진과제~사업선정으로 연계되는 논리체계 제시, 문제점 개선 및 생활권 활성화 측면 고려하여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연계사업에 대한 기준 제시

❍ (사업계획) 협약대상사업과 연계사업을 생활권 내 읍면지역에 주요 기능별로 표현, 읍면 간 기능 연계는 상위거점과 중위·기초거점과의 위계에 기반하여 기능 분담,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고려, 사업계획도의 명료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등의 모식도를 함께 표현

❍ (세부 사업계획) 생활권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체계에서 사업(대상·연계)이 지니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명시, 생활권 내 서비스 거점(상위·중간·기초)의 기능 확충, 기능 강화, 기능 보완 등 사업 추진을 통한 거점 위계별 지향점 구체화, 주요 거점과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명확히 제시, 생활권 내 유사 시설과의 기능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 (관리계획) 의결기구, 협의기구, 소통기구, 실행기구, 지원기구 등 기능별 추진기구의 구성, 역할과 기능, 세부 운영 규정 명시, 통합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세부 이행방안과 자립체계 구축 방안 제시, 지역사회 역량 관리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주체 발굴, 운영 주체 육성, 전문성 강화 등 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제시

▌농촌협약 연계사업

○ 농촌정주여건 개선 : (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돌봄서비스, (문체부) 문화예술향유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꿈꾸는 예술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부) 초등볼봄교실, 그린스마트스쿨, (여가부)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환경부) 영농폐기물 재활용,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생태관광체험시설, (국토부) 위험도로 개선, 스마트 돌봄, (행안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마을관리소,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지능형경로당,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농식품부)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운영 등

○ 농촌활력 제고 :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국토부) 도시재생, 지역수맞춤 지원, (행안부) 스마트타운, 골목경제 회복, 지역자산화 지원, 청년마을만들기 지원,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전통문화체험 지원,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특화 관광자원 선정,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상공인 창업 및 성장 지원, 시장경영혁신 지원, ((농진청)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치유형 농촌관광, (산림청) 산촌활성화, 산림교육 치유 활성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진흥,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 :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문체부) 관광두레,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환경부) 꿈꾸는 환경학교,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관광협의체

차 례

CONTENTS

요 약 ····· i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체계 ····· 5

제2장 자치분권 및 농촌협약 정책

1. 자치분권과 중앙권한 이양 ····· 9
2.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 13
3. 해외사례 분석 ····· 24

제3장 농촌협약지구 및 전북 추진현황

1. 농촌협약 시범·대상 지구 ····· 33
2. 전라북도 농촌협약 추진현황 ····· 50
3. 주요 개선 과제 ····· 57

제4장 농촌협약 계획 대응 방안

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 65
2.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 94
3. 농촌협약 연계사업 ·····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127
2. 정책제언 ····· 129

참 고 문 헌 ····· 131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 2-1]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 10
[표 2-2] 지방이양 대상 사무(1차) ····· 12
[표 2-3] 자치분권 시대 농촌정책 방향 ····· 14
[표 2-4] 지방이양사무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사업(2020년) ····· 14
[표 2-5]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지방 이양 ····· 16
[표 2-6]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19
[표 2-7] 농촌협약 추진체계(전담조직) ····· 20
[표 2-8] 농촌협약 추진체계(지원조직) ····· 20
[표 2-9] 프랑스 계획계약의 유형 ····· 25

[표 3-1] '20년 시범도입 지구 개요 ····· 34
[표 3-2] '21년 대상지구 개요 ····· 48
[표 3-3] 전북 농촌협약 추진현황 ····· 50
[표 3-4] 주요 개선과제 검토 항목 ····· 57

[표 4-1] 농촌공간 전략계획 목차 ····· 65
[표 4-2]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목차 ····· 94
[표 4-3] 농촌협약 연계사업 (농촌정주여건 개선) ····· 106
[표 4-4] 농촌협약 연계사업 (농촌경제활력 제고) ····· 114
[표 4-5] 농촌협약 연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 123

그 림 차 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 22
[그림 2-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 23

[그림 3-1] 원주시 공간구상 ····· 35
[그림 3-2] 영동군 공간구상 ····· 36
[그림 3-3] 홍성군 공간구상 ····· 37
[그림 3-4] 임실군 공간구상 ····· 38
[그림 3-5] 순창군 공간구상 ····· 39
[그림 3-6] 보성군 공간구상 ····· 40
[그림 3-7] 상주시 공간구상 ····· 41
[그림 3-8] 김해시 공간구상 ····· 42
[그림 3-9] 밀양시 공간구상 ····· 43
[그림 3-10] 이천시 공간구상 ····· 44
[그림 3-11] 영월군 공간구상 ····· 45
[그림 3-12] 괴산군 공간구상 ····· 47
[그림 3-13] 농촌협약 시범·대상 지구 위치도 ····· 49
[그림 3-14] 김제시 공간구상 ····· 51
[그림 3-15] 진안군 공간구상 ····· 52
[그림 3-16] 무주군 공간구상 ····· 53
[그림 3-17] 남원시 공간구상 ····· 54
[그림 3-18] 장수군 공간구상 ····· 55
[그림 3-19] 김제시 공간구상 ····· 56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체계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발표함(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에는 자치분권을 총괄·조정하고 실현하는 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시키고, 자치분권 종합계획(′18.9월) 발표, 지방이양일괄법의 하위 법령 개정(′20.9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전략인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 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

- 지방이양일괄법의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사무와 권한 400개를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법안의 시행령을 대폭 개정(12개 부처 30개)

❍ 농식품부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면서 농촌 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이슈가 부각됨

❍ 자치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광역 시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농촌개발사업의 지방사무로 이양은 정책 주체 이원화, 마을사업의 단발성 사업화, 배후마을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의 우려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 정책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주요 화두로 부상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분권 시대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됨

- 중앙과 지방이 상충되는 정책을 펼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협력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분권 개혁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필요성 제기

- 先계획 後지원 체계하에서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도입

○ 사업단위 점적인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생활 SOC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1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함

○ 농촌협약 도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지만 사업 규모가 큰 농식품부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협약 공모 선정이 요구되며, 농촌의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요한 공간계획 수립, 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연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이양된 마을 관련 사업들을 포함시키고 경제활력 제고, 문화향유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된 기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의무화

나. 연구 목적

○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관련된 정책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시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검토하여 세부 작성방향 제시

○ 공간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에서 제시한 비전·목표·전략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연계사업 제시

2. 연구 내용 및 체계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13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단기) 2022년~2026년, (중장기) 2022년~2041년

❍ 내용적 범위 : 농촌개발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시범지구 및 시군 추진현황 분석, 계획수립 및 연계사업 등 농촌협약 대응 방안

나. 주요 연구내용

❍ 농촌개발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 지방분권 정책과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사업, 농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촌협약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농촌협약 개념과 유사한 해외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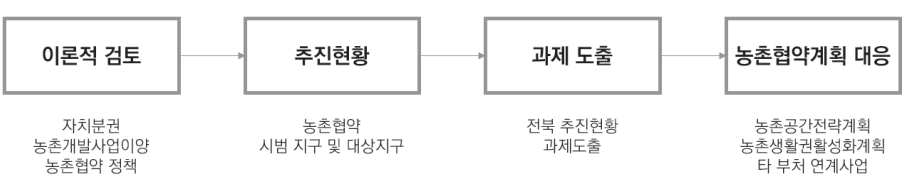
❍ 시범지구 및 시군 추진현황 분석

- 농식품부에서 2020년 선정한 9개 시범지구와 2021년 선정한 20개 지구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시사점
- 도내 13개 시군의 농촌협약 추진상황 분석

❍ 농촌협약 연계사업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 농촌협약계획서 작성시 검토 가능한 타 부처 연계사업 분석

다. 연구 체계



제 2 장

자치분권 및 농촌협약 정책

1. 자치분권과 중앙권한 이양
2.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3. 해외사례 분석

제 2 장 자치분권 및 농촌협약 정책

1. 자치분권과 중앙권한 이양

가. 자치분권 정책 개요

❍ 역대 정부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을 위한 노력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지속으로 추진 중임

- 국민의 정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특별법 제정, ′99.1월)를 중심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관련된 지방분권 업무 추진
- 참여정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대통령령 제정 ′03.4월)에서 로드맵 수립 등 지방분권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사무이양 심의 등 추진
- 이명박 정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특별법 개정 ′08.2월)에서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특별법 제정 ′10.10월)를 설치하고 행정체제개편 추진
- 박근혜 정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특별법 제정 ′13.5월) 설치 · 운영
- 문재인 정부 : 자치분권위원회(특별법 개정, ′18.3월)에서 자치분권 업무 총괄 · 조정

❍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자치권 및 자율성 제고와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선정

- 지방자치 실시 20여년이 경과했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3,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6:24 등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
-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등

❍ 범 정부적으로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 · 조정하기 위해 ′08.3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치제도분과, 재정 · 기능이양분과, 자치혁신분과 위원회 등으로 기능을 세분함

○ 미래사회 대응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한 자치분권체계 확립을 위해 2008.9월 6대전략 33개 과제를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함

- 저출생 및 고령사회 가속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성이 문제해결의 열쇠이고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포용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 확립

-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주요 목표로 설정

[표 2-1]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과제명
주민주권 구현	• 주민 참여권 보장 •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중앙권한의 획적인 지방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대도시 특례 확대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중앙 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국고보조사업 개편 •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개편
중앙 지방 및 지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중앙 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방 행정체제 및 선거제도 개선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자료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종합계획(안), 2018.9

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1) 지방이양 개요[1)]

❍ 자치분권 6대 전략 중 농촌개발사업 이양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부문으로 세부 과제는 중앙 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과 중앙권의 기능 포괄 이양임

❍ 중앙 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은 지방자치법상 예시된 지방사무의 시의성 및 현장적합성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관위임사무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임

- 국가 및 자치사무 배분 원칙과 기준 명확화 : 현행법상 포괄적 구분 기준을 실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 · 고용 · 복지 등 주요 분야별 예시를 통해 구체화, 구체화된 기준은 지방이양 대상 기능 발굴·심의 및 제·개정 법령 사전협의 시 활용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또는 국가 환원 추진

- 광역 · 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 : 광역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로,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적 기능은 광역으로 합리적 재배분, 인구과소화 등으로 기초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광역으로 이관·위탁 처리하거나, 특별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으로 처리

❍ 지방분권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그동안의 단순 집행사무 이양에서 탈피하여 기능 중심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 기존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방식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 규제완화,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주민 체감도 제고

  *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환경 개선, 교통환경, 지역주민 복지 향상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지역주민·시민단체, 중앙·지방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선 발굴·이양,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이양 추진

1)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리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과거 지방이양 의결(′00~′12) 후 장기간 미 이양된 사무(518건)의 조속한 이양추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지방이양 행·재정지원 제도화 : 지방이양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2) 지방이양 세부 내용

❍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18.1.23~′20.1.22)에서는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였으며, ‘21.1월 시행 예정임

- 사무 수행행태는 400개 사무 중 253개 사무(63.2%)가 기관위임사무(국가→시도)이며, 96개 사무는 국가 직접수행, 51개 사무(12.8%)는 시도 수행 중

- 400개 사무 중 349개 사무(87.2%)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며, 51개 사무(12.8%)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표 2-2] 지방이양 대상 사무(1차)

구분	계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산업부
법률	46	1	2	1	1	6	3	2	4
사무	400	4	15	2	1	20	26	2	22
부처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소방청	산림청	
법률	3	2	1	9	7	1	1	2	
사무	12	5	51	70	135	3	1	31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20.10.9.

❍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20.7.7~′22.7.6)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임

-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되었으나 미 이양된 사무 209개와 지역균형뉴딜 사무, 코로나 19 대응 등 신규로 추가 이양할 사무 등을 일괄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

2.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가. 자치분권 시대 농촌정책 방향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자치분권 정책기조가 강력 추진되면서 농촌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의 정책은 목표 측면에서는 생활권 복원을 강화하고, 수단 측면에서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함

- 생활권 복원(365 생활권)은 농촌 어디서나 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국정과제(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에 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 : ′22년까지 100개소 이상(′19년까지 78개소 선정)

  * 기초생활거점 : ′18년~′22년까지 500개소 이상(′19년까지 299개소 선정)

  * 마을만들기 : ′18년~′22년까지 신규 1,000개소 이상(지방이양)

  * 생활 SOC 기능 복합시설 : ′22년까지 900개 이상(′18년까지 369개소, ′19년 착수 119개소)

-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과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의 종합적 계획

❍ 농촌협약제도 도입을 통한 생활권 복원을 위해 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자체의 역할, 지원방식, 평가에 이르기까지 추진체제의 전환이 도입됨

- (계획 수립과정) 기존에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부재하거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어도 계획과 실제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원하는 先계획 候지원 체제를 도입함

- (지자체 역할)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정책 또는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던 지자체의 역할을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행수단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도록 전환함

- (지원방식)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신청한 개별사업들을 평가해서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역 여건 및 수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함

- (평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상호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환류하는 체제를 강화함

[표 2-3] 자치분권 시대 농촌정책 방향

구분	과거의 방식	새로운 방식
과정	·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부재 또는 미흡 · 계획과 사업 추진과의 괴리	· 先계획 後지원(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전제로 지원)
역할	· 정부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 · 지자체는 이를 시행하는 대리자 역할	· 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설정 · 지자체가 구체적 실행수단 기획
지원 방식	· 개별 사업 중심으로 평가, 지원	· 지역이 필요로 하고 정책적 시너지가 큰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지원
평가 시스템	· 일방적으로 설정된 정책 목표	· 상호 합의하에 목표를 성정하고 목표의 달성 여부는 환류

자료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할 길, 2017

나.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 외에 농촌지역과 관련된 부처의 단위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짐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도에 대규모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20년 적용)되었으며 세부사업은 해수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 지방이양사무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사업(2020년)

부처	지방 이양사업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일자리
문체부 (2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작은영화관,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예술인기념시설, 문화특화지역조성, 비엔날레지원, 역사전통문화도시, 전통문화진흥, 전통사찰보수정비,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역문화예술특성화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관광지개발, 광역권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캠핑장, 생태녹색탐방로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체계구축,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 (지역문화생사지원) 지역문화행사
농식품부 (19)	(농업기반정비) 가축분뇨처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교육훈련,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구축,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노후단지개보수,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농축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축산물제조가공, 6차산업화

부처	지방 이양사업
	농축산물체험관광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향토산업육성 (농촌형교통모델) 농촌형교통모델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환경부 (7)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식수전용저수지확충 (생태하천복원) 생태하천복원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비산먼지저감, 산업단지완충녹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여가부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시설확충
국토부 (9)	(주차환경개선지원) 노상무인주차기설치, 이륜차 및 관광버스주차장설치 (대중교통지원) 거점지역기반시설, 물류단지진입도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 (지역거점조성지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 (지방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해수부 (26)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마리나시설조성, 해양쓰레기수매, 해양관광자원시설,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어업기반정비) 내수면어업생산시설, 멸종위기어종생태계복원,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수산종묘관리, 양식어장관리,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어업인편익시설, 어초어장관리, 유류피해지역지원, 인공어초, 지자체관리어항건설, 해조류부산물재활용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수산식품특화단지조성개보수, 어촌체험관광지원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수산물안전검사장비구축, 수산물안전검사장비운영
문화재청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농진청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산림청 (15)	(산림경영자원육성) 나무은행조성운영, 목재이용가공지원, 산림서비스증진,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임산물수출촉진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숲길조성관리, 유아숲체험원, 산림휴양치유인프라, 지방수목원및박물관, 지방정원, 지역생태숲, 지자체도시숲, 치유의숲,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중기부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새만금청	(산단공업용수도건설지원) 공업용수도건설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2018~2021

○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은 거점 조성과 관련된 농식품부에 존치하고,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판단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됨

[표 2-5]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지방 이양

구분	농식품부 존치 사업	지자체 이양사업	
성격	지역 거점 조성	지역밀착형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규모	4,869억원	4,387억원	
세부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농촌신활력플러스 시군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다움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재능나눔 농촌형공공임대주택시범사업 기타협업 등

자료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할 길, 2017

다. 농촌협약 정책 개요[2)]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자치분권 강화로 읍면 소재지와 함께 정주생활권을 구성하는 배후마을 정책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됨

- 지방이양 결정으로 정책 대상인 하나의 정주생활권에 읍면 소재지 거점 개발은 중앙이,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가 전담하는 정책 주체의 이원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주요 화두로 부상

- 중앙과 지방이 '농촌 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연계·보완하여 전개토록 유도 필요

- 중앙과 지방이 상충되는 정책을 펼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협력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분권 개혁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필요성 대두

○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면서 농촌정책의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시 군 단위 다수의 계획이 중복 산발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예산 투자와의 연계 미흡으로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

2) 농촌협약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재정리

- 시군당 연평균('15~'19) 72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예산이 투자되나, 농어촌서비스 기준 목표 달성 시군 비율은 매우 저조

  * 농어촌서비스기준 : 초등 · 중학교 보급 14.5%, 평생교육 16.7%, 노인복지 20.3%, 소방 출동 24.6%, 하수도 보급 29.0%, 상수도 보급 31.2%, 영유아 보육시설 44.2%

❍ 사업단위 점(點)적인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중앙은 세부적 사업 기획 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달성해야하는 핵심적 정책 과제(agenda) 발굴·제시에 집중

- 지역은 정책 목표에 대해 농촌공간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과 합치하는 구체적 실현가능한 종합 '사업계획'을 수립

❍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협약을 통한 농촌개발사업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방식 전환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됨

❍ 농촌 협약의 주요 목적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농촌활력 및 삶의 제고 등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5조,「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등

❍ 농촌협약의 정책 목표를 고려한 주요 특징은 '先계획 後지원', '지원방식 전환'임

- 지역 주도로 공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정책사업을 지원

- 중안은 시군에 지원 가능한 국비 한도를 제시하고 지방은 한도 내에서 정책과제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구상

2) 전제조건

❍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연계하고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함

-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기존의 사업내용, 기간, 방식 등을 유지하되 변경 필요 시 계층 생활권, 서비스 접근성, 지역민 수요조사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 사유 제시
-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 공간의 계획적인 활용 및 보전, 정비를 위한 전략 수립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종합적 사업계획

❍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야 함

- 전담조직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
- 농촌협약 위원회는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하고, 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등 관련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 시 가점 부여

3) 대상 및 주체

❍ 협약대상은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추진 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임

-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업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등 지역의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수립
-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농촌분야 농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민간 투자사업 등을 모두 활성화계획에 포함

❍ 협약주체는 농식품부 장관,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협약에 명기하고 시도지사도 참여 가능함

- 지자체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도 협약에 명기

- 협약 세부내용에 시도 예산 투자시 시도지사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 가능

[표 2-6]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구분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간범위	20년	5년
공간범위	시군	시군내 생활권
기본개념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 지자체 · 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의 사업들의 통합계획
주요내용	· 시군 전체의 사회 · 경제 · 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 현황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 · 접근성 현황 · 시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각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 해당 생활권의 개선 · 활성화를 위한 비전 · 목표 및 추진과제 · 협약 당사자 구성 및 추진체계 ·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추진 예정 사업 목록, 예산 · 재원, 일정 등) ·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자료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할 길, 2017

4) 거버넌스 구축

❍ 중앙 : 전략 활성화계획 검토 조정 승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을 담당 지원하는 '농촌협약 추진단'과 '농촌협약 지원단'을 운영

- 농식품부 내에 협약 대상사업 담당부서(담당자)로 추진단을 구성하며, 협약 사업 관련 각 부서의 의견 수렴 조정 역할 이행

- 한국농어촌공사(지역개발지원단)를 지원단으로 지정, 농촌협약 시 군 선정, 각종 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협약 평가 등을 전담 지원

❍ 광역 : 각 시 군의 협약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전략 활성화계획 사전 검토 자문, 이행 지원 등을 담당

- 시 도 차원에서 시 군의 협약 이행상황을 주기적(분기 반기별)으로 점검,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점검결과는 협약 평가 시 활용)

- 기존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시 군의 전략 활성화계획을 사전 검토 자문하며, 상충 중복되는 계획내용 조정 등을 지원

-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활성화계획 이행에 시 도비를 투입하고, 전담조직을 운영

○ 기초 : 행정 내 농촌협약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을 '농촌협약 지원센터(가칭)'로 지정 운영하는 등 추진체계 정립

- 시 군 전담조직(상근)은 농촌지역개발, 농식품산업 육성, 도시계획, 건축, 지역 역량강화, 각종 인 허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농촌협약 지원센터는 계획 수립, 지역의 추진주체 육성,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며, 가급적 기존 중간조직을 통합 활용하여 운영

[표 2-7] 농촌협약 추진체계(전담조직)

구분	전담 조직
중앙 (농촌협약 추진단)	(구성)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및 연계사업 담당부서 (역할)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검토, 사업부서 간 의견 조정
광역 (광역 전담조직)	(구성) 농촌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등 담당자로 구성 (역할) 협약평가, 협약 주체로 참여해 예산투입, 협약 이행 등
기초 (기초 전담조직)	(구성) 농촌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등 담당자로 구성 (역할)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 이행, 지역역량강화 등 전담

자료 : 농식품부 내부자료, 2019

[표 2-8] 농촌협약 추진체계(지원조직)

구분	지원 조직
중앙 (농촌협약 지원단)	(구성)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농진청(협조) (역할) 365생활권분석, 성과평가 등 관련 기준 개발 이행 지원
광역 (광역 농촌협약지원센터)	(구성) 광역단위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 · 활용하여 운영 (역할)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검토 · 자문, 시군간 조정 등 지원
기초 (기초 농촌협약지원센터)	(구성) 기초단위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 · 활용하여 운영 (역할)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 이행, 지역역량강화 등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5) 기간 및 효력

○ 협약기간은 타 법정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하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사업 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목표 등에 대한 문서상 합의로 협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의무화됨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협약이 추진될 시 군의 생활권에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의무를 이행

- 협약 체결 시 군은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마을만들기사업 포함)에 대해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6) 재원 및 규모

❍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공공기관·민간 등의 투자유치가 가능함

- 지자체 자체사업(지방비 100%) 및 공공기관·민간의 투자규모는 제한 없음

❍ 재원 규모는 국비 기준 개소당 최대 300억원+α(인센티브)이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7:3임

7) 평가 선정

❍ 평가 절차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전략계획(배점 60%), 활성화계획(농촌정비계획 포함, 40%)에 대해 대면평가 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 선정

-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전략계획의 타당성(360점), 지자체의 추진 의지·준비도(120점), 투자 및 관리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90점), 농촌협약의 도입 필요성(30점) 등을 검토하며, 빈집정비, 전제조건 이행, 협의회 구성·운영,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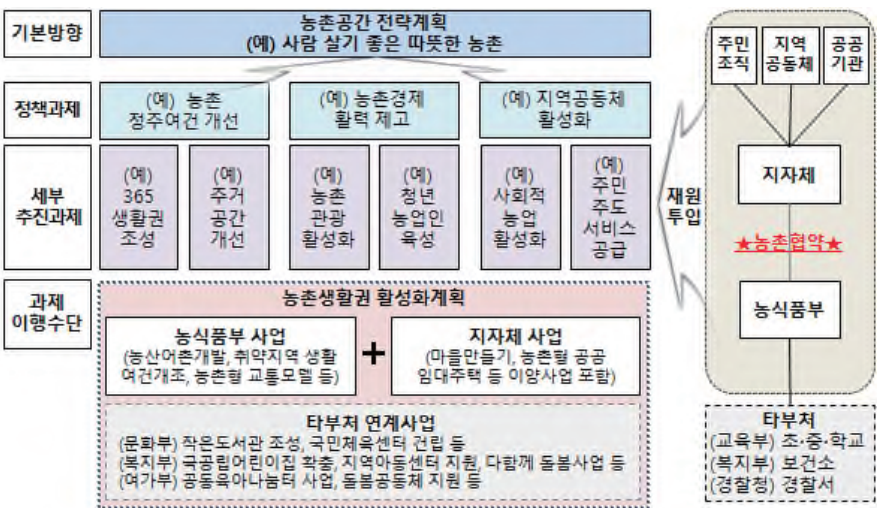
-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사업 추진 가능성(75점), 지역의 추진 의지·준비도(30점), 계획의 타당성(135점), 투자 및 관리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60점) 등을 검토

- 농촌공간 정비계획은 계획의 적정성(30점), 계획의 구체성(30점), 투자 및 관리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30점), 지역의 추진 의지·준비도(10점) 등을 검토하며, 전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실제 집행률 83% 이상, 제사한 모든 사업 추진이 100% 확정된 경우,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시 가점 부여

❍ 선정 시 추가적으로 균형발전, 빈집정비, 지자체 의지 등을 고려함

- 균형발전 : 균형발전사업임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협약 도입 시군이 가급적 특성 시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 빈집정비 : 읍면 소재지, 배후마을 등의 빈집 정비를 정책과제에 포함하는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자체 의지 : 농촌협약 신청서 제출 전까지 모든 전제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지자체의 협약 도입·이행 의지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

8) 추진 절차



[그림 2-1]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

○ 현황 분석 : 생활권 구분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인구 사회 등 현황 전망, 계층 구조, 생활권,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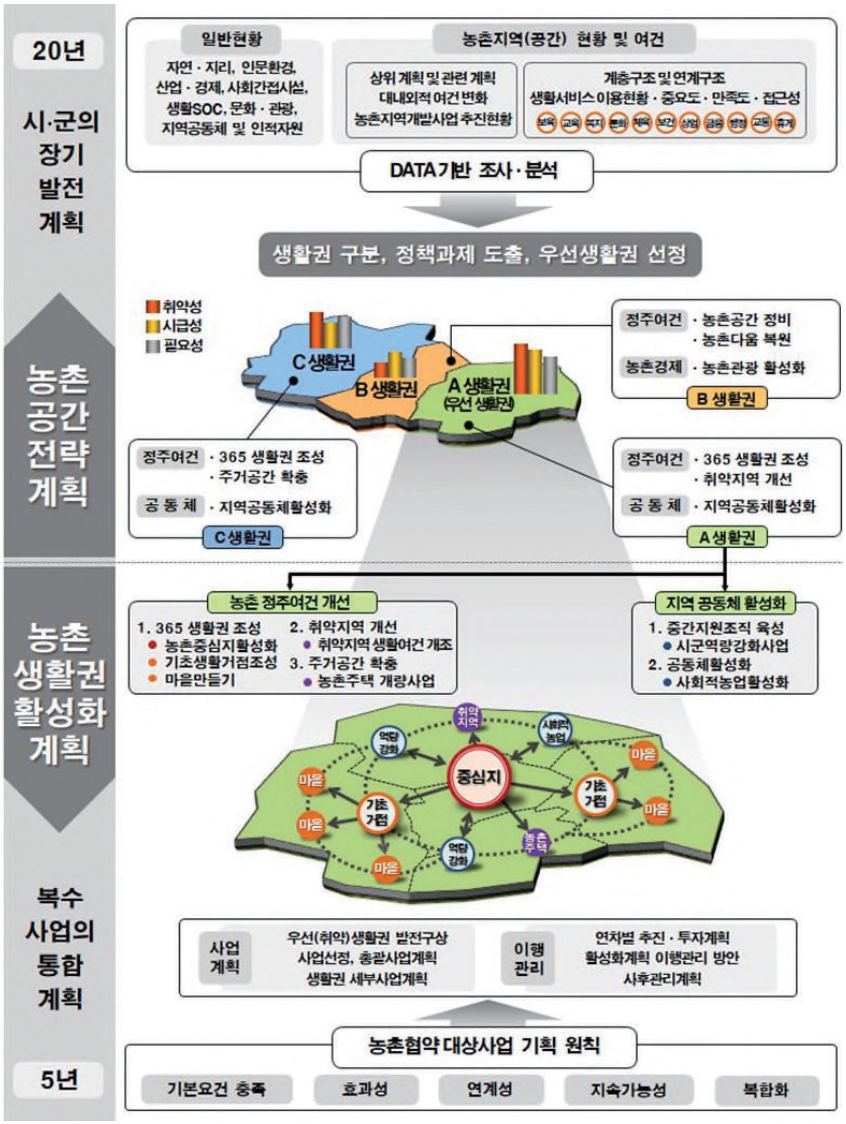
○ 전략계획 수립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향후 개선방향 등을 포함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 :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각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추진과제(사업 예산 포함)를 담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

○ 협약 체결 : 활성화계획을 근거로 농촌협약을 체결, 협약에 근거 하여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정책사업을 지원 시행

○ 성과 관리 : 활성화계획 수립 시 협약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관리계획을 수립 점검

- 추진실적과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 마련



[그림 2-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3. 해외사례 분석

가. 프랑스 계획협약

1) 도입 배경

❍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수도 파리 및 주변 지역으로 집중되는 인구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상위 계층의 행정구역 광역화 및 하위 계층의 행정구역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됨

-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지옹은 22개에서 13개로 광역화시키고, 코뮌을 중심으로 연합체의 참여와 기능 강화

❍ 1982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지역계획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지역의 협력이 국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함

- 계획계약을 통해 국가는 국토 정책의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전국단위 계획과 지역단위 계획 간의 일관성을 확보

- 국가는 전 국토 차원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 간 매칭비 분담률을 차등화시켜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역간 격차 완화에 기여

2) 운영 방식[3)]

❍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개발 및 정비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CIADT), 국토 및 지역개발 기획단(DATAR)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CIADT는 국토계획 및 발전 관련 정책과 우선사업을 결정하며, 계획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처 장관이 참여함으로써 부처의 대표성을 확보

- DATAR는 CIADT의 사무처로서 주요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담당하며, 계획계약 지침을 작성하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을 수행

3) 국토연구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 Brief, 2011

○ 지역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 의회가 핵심 역할을 담당함

- 레지옹 지사는 수상과 부처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DATAR의 위임을 받아 레지옹과 계획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상과 지역개발계획을 조정

- 레지옹 의회는 레지옹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계약 예산을 심의하며, 의장은 레지옹 지사와 계획계약에 대한 협의 결정권을 보유

○ 계획계약 수립은 DATAR의 지침마련에서 시작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레지옹 지사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레지옹 의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완료됨

- 국가와 레지옹은 DATAR의 지침에 따라 계약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CIADT의 심사 및 승인과 레지옹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

○ 계획계약 투자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지출되며, 국가예산의 일부는 국토개발 및 정비에 관한 국가기금(FNADT)에 의해 조달됨

- 제5차 계획계약(2007~2013년)의 총 투자 규모는 292억 유로이며, 국가가 127억 유로, 지자체가 153억 유로, 기타 공공단체가 11억 유로를 분담

○ 계획계약의 유형은 광역계약, 초광역계약, 특정지역계약 등 세 가지로 구분됨

[표 2-9] 프랑스 계획계약의 유형

계약 유형	대상 지역	주체	재원
광역계약	레지옹	국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및 협력체, 도농연합체	국가와 레지옹의 동등부담 원칙
초광역계약	산악지역 하천지역 연안지역	국가, 레지옹, 데파르트망, 공공기관(수자원공사 등)	국가와 레지옹 동등 부담원칙 유럽연합지역개발기금
특정지역계약	도농권지역 도시권지역	코뮌 및 협력체, 도농연합체	지방세, 교부금, 단일 사업세 등 상호분담

자료 : 국토연구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 Bridf, 2011

- 광역계약은 레지옹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26개 광역계약에서는 교통, 교육·연구, 지속가능개발, 농업, 고용·산업, 문화 등에 투자

- 초광역계약은 산악 · 하천 ·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5대 하천유역 계약은 센느강유역, 루아르강유역, 론강유역, 로강계곡, 뮤주강유역을 대상으로 홍수예방, 수질보전,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사업 추진

- 특정지역계약은 도농권 지역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5개 산악지역 계약은 알프스, 쥐라, 중앙고원, 피레네, 보스가스 산지를 대상으로 관광, 자연보전, 방재, 전원 및 삼림활동, 국제협력 등의 사업 추진

3) 농촌 협약[4)]

❍ 프랑스의 농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약으로는 '농촌성 협약'(도시 · 농촌 상호성 협약)이 있는데 도시의 외생적 수요를 활용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프랑스의 '도시 · 농촌 상호성 협약'은 2015년 농촌을 위한 범부처위원회인 농촌성 위원회(CIR)에서 도출된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 CIR은 2015년~2016년 국무총리가 주관한 위원회에서 평등과 형평성, 지역 및 지역주체의 책임 강화 및 역량 배양, 도시와 농촌의 유대 연계 강화, 상호보완성을 농촌발전 정책의 원칙으로 설정

- 도시 · 농촌 상호성 협약 프레임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코뮌 · 코뮌연합체들을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 · 추진

- 계약의 지역단위 주체인 코뮌은 협약내용 수립 시 '국가 지역 간 계획 계약'의 핵심영역을 적용하며 6가지 주제 중 지역에 가장 유용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여 액션플랜을 수립

  * 6대 주제 : 서비스 접근성, 지역의 매력 제고, 중심지 활성화, 이동성, 생태적 전환, 사회통합 · 연대

- 계약은 국가를 대신한 데파르트망 지사와 코뮌 대표, 민간 조직 등이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약 5:5 비율로 분담

❍ 프랑스 전역에서 40개의 농촌성 협약이 체결('17년 기준)되어 2017년~2020년 기간에 정부 예산 약 21억 6,000만 유로(한화 가치 약 2조 8,0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임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 거버넌스 연구, 재정리, 2019

나. 영국 Neighbourhood Planning[5)]

1) 도입 배경

❍ 영국의 공간계획제도는 농촌에 대한 개발 압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1947년 제정된 도시·농촌계획(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기초하고 있어 최근까지는 하향식 형태의 강력한 개발행위 규제의 특징을 보임

❍ 하향식 공간계획 제도와는 별도로 농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계획 수립 지원 정책으로 패리쉬 계획(Parish Plan) 수립을 전국적으로 시행함

- 패리쉬 계획은 2000년 DEFRA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를 통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활력있는 마을 구상'의 일환으로 농촌 커뮤니티의 패리쉬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농촌 패리쉬의 절반 가까이가 계획 수립에 참여

- 대규모의 사업 또는 문제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세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들을 계획서에 반영

❍ 패리쉬 계획은 2000년대 초반 집중 수립되었지만 공간계획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커뮤니티 이슈를 다룸으로써 법정 계획과의 연계성에 한계를 보임

- 공간계획제도 불합치, 소관 부처가 다른데서 발생하는 연계·협력 및 실행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

❍ 기존 하향식 계획시스템은 공동체의 요구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경직적인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2011년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Localism Act)을 제정함

❍ 또한 공동체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Neighbourhood Plan 제도를 도입함

- Localism Act 제정과 더불어 각 커뮤니티에서 Neighbourhood Plan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하향식 공간계획제도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 계획제도로 전환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 거버넌스 연구, 재정리, 2019

2) 운영 방식

❍ 공동체가 주도하는 Neighbourhood Planning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지역 주민은 이 중에서 선택하거나 함께 추진이 가능함

- Neighbourhood Plan :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제시(기존 지역계획의 부분)

- Neighbourhood Development Order : 공동체의 일정한 구역에 특별하게 정해진 개발계획을 허가하는 것(planning permission)이며, 특정한 목적에 한해 수립되는 작은 수준의 Neighbourhood Planning

  * 이 계획의 허가 범위 내에 있는 개발 제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 가능(예전에는 개별 개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허가

- Community Right to Build : 작은 규모(예를 들어 5~10개의 새로운 집의 건축)의 개발과 관련되며, 공동체의 멤버로 구성된 법인 형태에 의해서 주도

❍ 추진절차는 Neighbourhood의 범위설정, 수립 주체 구성, 지역계획당국에 계획수립 신청, 결과물 산출, 계획 점검(계획의 적절성 여부), 주민투표 및 계획 발효(50% 이상 지지) 단계로 이루어짐

3) 지원 현황

❍ 정부는 예산과 단체 등을 통해 지방정부 또는 공동체의 계획수립 과정을 지원함

- ′15년까지 5,0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방정부에 제공하여 Neighbourhood Plan을 제안한 공동체를 지원, ′18년까지는 Locality와 Groundwork UK라는 단체를 통해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였고, ′18년~′22년 기간에는 22.8백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

❍ ′18년 기준 전체 커뮤니티의 약 10%가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도 확산을 위해 추가 법률을 제정함

- 영국 전역에 걸쳐 계획수립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는 약 18,000개 이며, ′18년 기준 1,758개 커뮤니티에서 Neighbourhood Plan을 수립 중이거나 승인 절차 완료

- 2017년에는 Neighbourhood Plan의 효력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변경 절차 개선 등 Neighbourhood Plan Act 2017 도입

다. 시사점

❍ 해외에서 추진했던 계획협약과 국내 농촌협약은 추진배경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지방분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라는 배경은 유사

- 프랑스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추진되었으며, 영국은 농촌개발 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 국내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및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라는 목적 외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적 요인이 존재

❍ 프랑스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성 협약으로 추진된 '농촌성 협약'에서 핵심주제로 설정한 중심지 활성화, 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회통합·연대 등은 국내 농촌협약에서도 주요 전략으로 추진 필요

- 또한 농촌발전 정책의 원칙으로 설정한 지역 및 지역주체의 책임 강화 및 역량 배양, 도시와 농촌의 유대 연계 강화, 상호보완성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요소

❍ 영국의 공간계획 제도에서 추구하는 현장밀착형 과제 중심의 계획수립 체계를 준용하여 대규모의 사업 보다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생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내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시군들의 대부분이 계획수립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대행체제로 추진되고, 준비기간이 짧아 농촌협약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 및 참여가 부족해 주민체감형 계획 수립에 한계 발생

❍ 이외에도 국내 농촌협약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공간활성화 전략과 생활권 활성활를 위한 중심지 기능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발적 역량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도시 지역의 외생적 수요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의 유도 필요

제 3 장

농촌협약지구 및 전북 추진현황

1. 농촌협약 시범 · 대상 지구
2. 전라북도 농촌협약 추진현황
3. 주요 개선 과제

제3장 농촌협약지구 및 전북 추진현황

1. 농촌협약 시범·대상 지구

1) 농촌협약 시범지구(2021~2025)

❍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18년~′19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적용되는 2020년은 과도기적 시기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 ′19.12월 농촌협약 제도가 도입 된 후 ′20년에는 9+3(시범+예비)개소를 선정

❍ 기본방향 :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시범 추진

❍ 전제 조건 : 신청 전 시 군은 제2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농촌협약 추진계획을 수립

-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시 군은 전략 활성화계획 수립, 전담조직(부서) 농촌협약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구성 운영 등 전제조건 이행

❍ 대상 시군 : 농촌협약을 통해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복수의 농촌분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13개 시·군

❍ 도입 절차 : 시 군이 제출한 농촌협약 추진계획서를 평가하여 총 9개 시군을 시범도입 시군으로, 3개 시 군을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

-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시 군 내 생활권에 대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농식품부 승인 시 활성화계획을 근거로 협약 체결

* 농촌협약제도 도입(′19.12월) → 시범·예비 도입 시군 선정(′20.2월, ‘20.6월) →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완료(′21.4월) → 농촌협약 체결(′21.7월)

❍ 인센티브 : 농촌협약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모든 시 군에 협약 대상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

○ 선정 지구 : ′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선정 공모 및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20년 6월 시범도입 시군(9개소)과 예비도입 시군(3개소)를 선정함

[표 3-1] ‘20년 시범도입 지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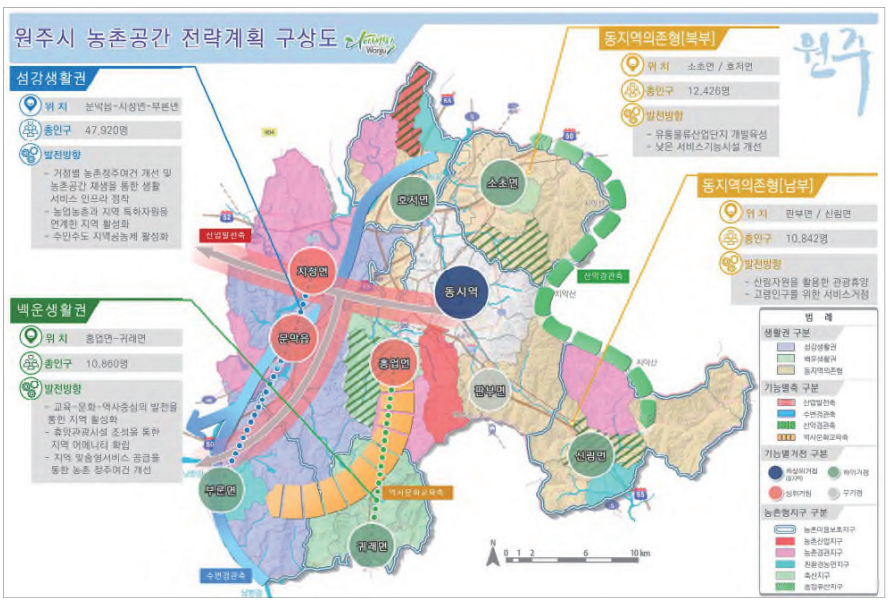
구분	협약명	행정구역	대상지역		
			읍면	인구(명)	면적(ha)
강원 원주시	원주시 섬강생활권	1읍 8개면	1읍 4개면	46,409	42,528
충북 영동군	영동군 중부생활권	1읍 10개면	1읍 3개면	31,841	327
충남 홍성군	홍성군 광천·갈산 생활권	3읍 8개면	1읍 7개면	27,780	33,470
전북 임실군	임실군 2+1 생활권	1읍 11개면	9개면	17,985	43,536
전북 순창군	순창군 중부생활권	1읍 10개면	1읍 7개면	21,962	28,653
전남 보성군	보성군 벌교생활권	2읍 10개면	1읍 4개면	19,405	30,297
경북 상주시	상주시 함창·낙동생활권	1읍 18개면	1읍 7개면	25,348	47,743
경남 김해시	김해시 동부생활권	1읍 6개면	3개면	14,153	16,932
경남 밀양시	밀양시 1생활권	1읍 10개면	4개면	14,516	33,70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0

1 강원도 원주시[6)]

○ 비전 : 더불어 나아가는 행복한 푸른공간, 원주

○ 목표 : 365일 모두가 편리한 원주, 미래로 나아가는 다이내믹 원주,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한 원주



[그림 3-1] 원주시 공간구상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시군역량강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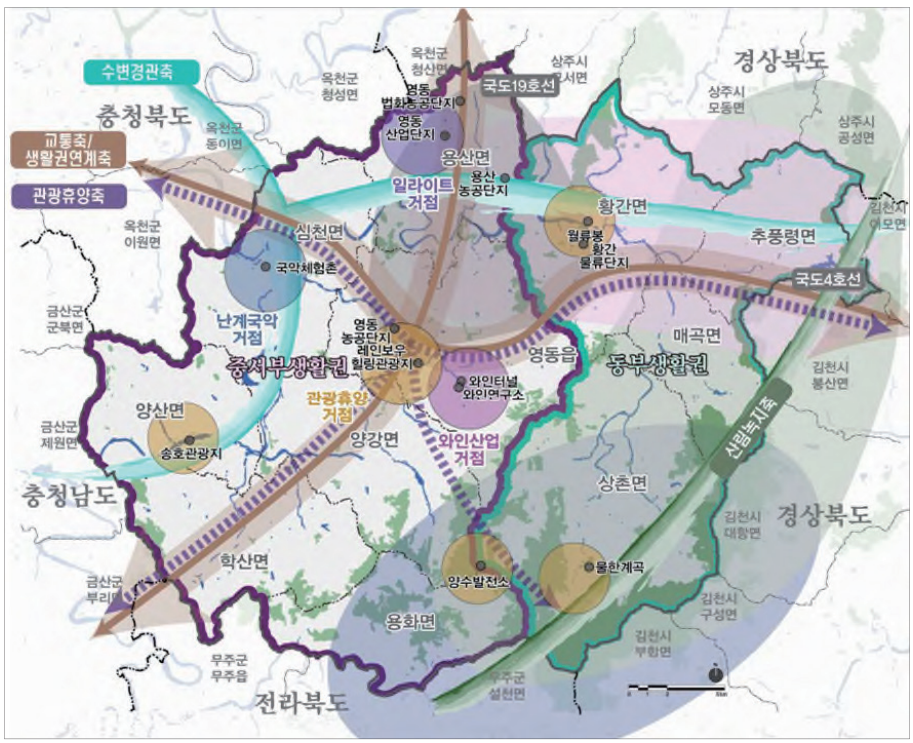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자율·종합),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 원심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문막교 재가설,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서관 건립,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내륙어촌(강마을)재생, 간현관광지 기반시설확충 및 종합개발,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 은행나무 광장 조성, 중간지원조직 육성

6) 강원도 원주시(2021), 원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2 충청북도 영동군[7)]

○ 비전 : 꿈과 희망이 있는 마음의 고향, 여유로운 영동

○ 목표 :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터, 혁신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일터,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그림 3-2] 영동군 공간구상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형교통모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경관보전직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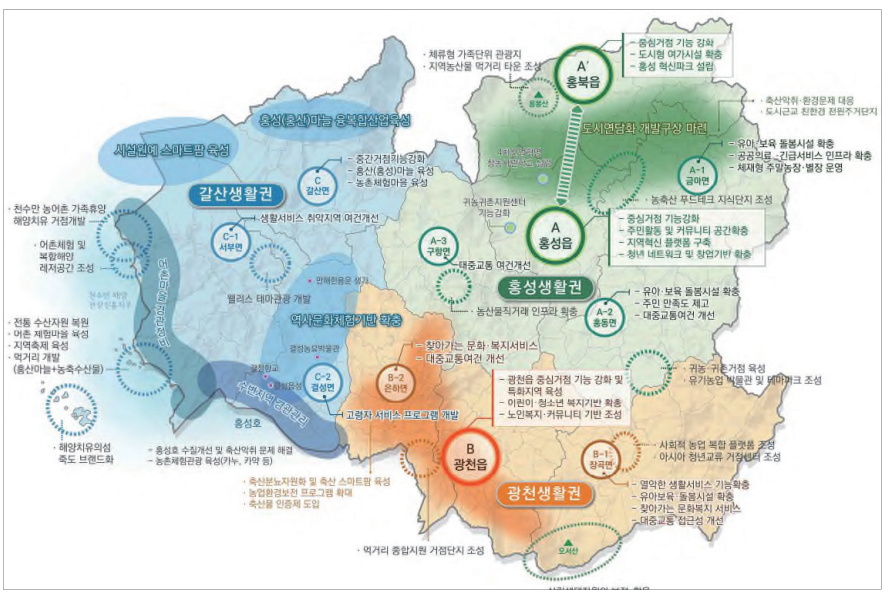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자율-종합), 영동군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동문화원 이전, 실내체육관 조성, 농산어촌주거플랫폼, 농촌재생뉴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

7)충청북도 영동군(2021), 영동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③ 충청남도 홍성군[8)]

○ 비전 : 현재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홍성군

○ 목표 : 주민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홍성,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으로 살기좋은 홍성, 농촌경제 활성화 및 다각화로 잘 사는 홍성, 새로운 커뮤니티 육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홍성



[그림 3-3] 홍성군 공간구상

○ 생활권 대상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형교통모델,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축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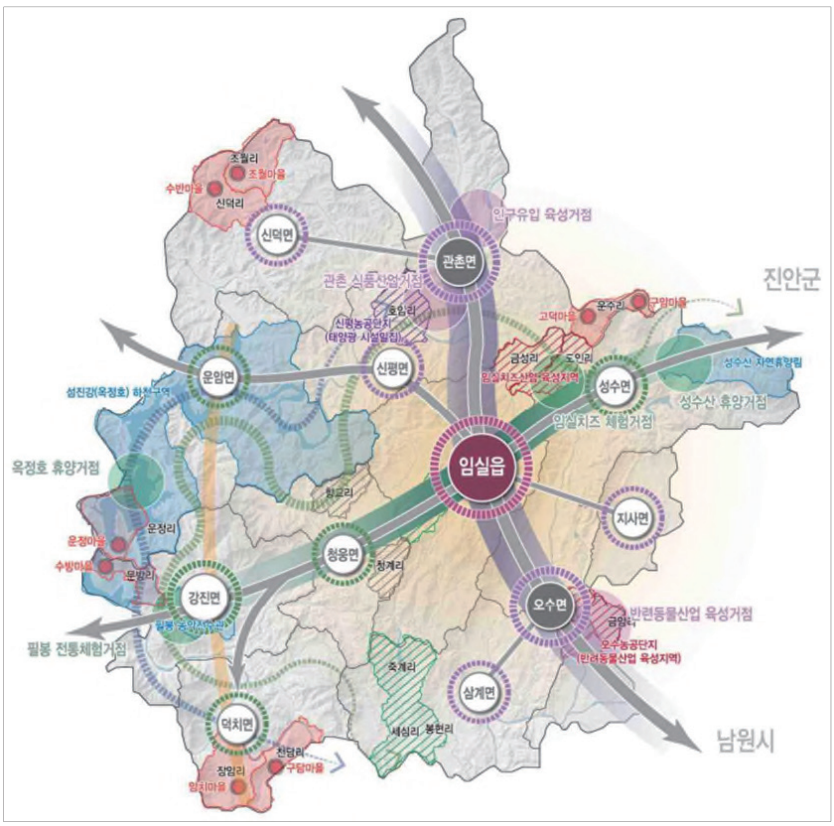
○ 생활권 연계사업 : 농촌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8) 충청남도 홍성군(2021), 홍성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④ 전라북도 임실군[9)]

○ 비전 : 하나되어 일상의 행복을 채워주는 3/6/5 강소도시 임실

○ 목표 : 지속 성장하는 365복합거점 조성, 지역중심 특화자원을 활용한 성장동력 강화, 사회통합 공동체 실현



[그림 3-4] 임실군 공간구상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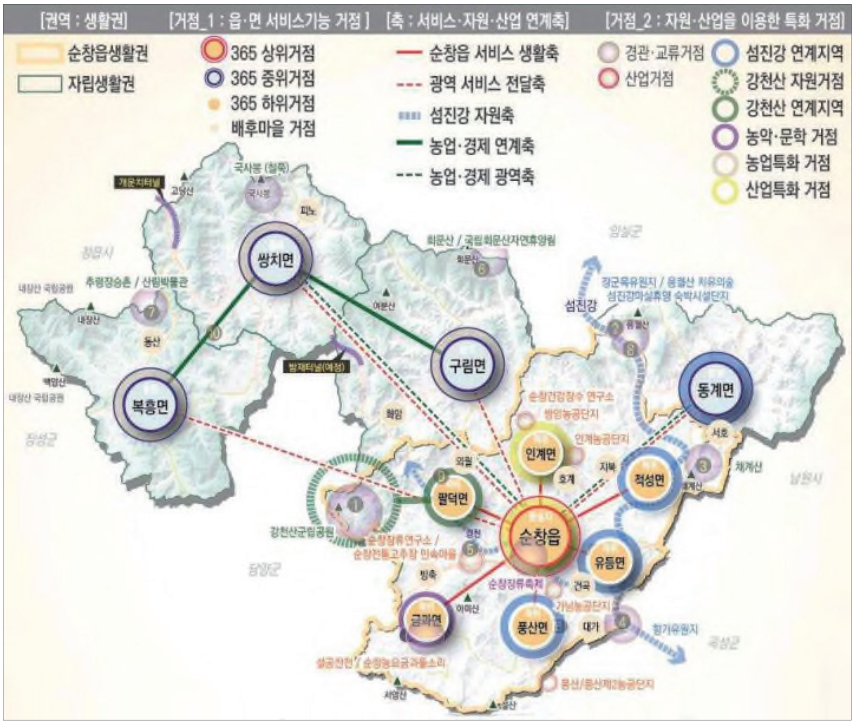
○ 생활권 연계사업 : 농촌신활력플러스,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중심상권 활성화, 도시재생활성화, 반려동물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농촌배움 아카데미 운영, 마을만들기, 취약지역 방문 의료서비스 등

9) 전라북도 임실군(2021), 임실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⑤ 전라북도 순창군[10)]

○ 비전 : 생활서비스를 원료로 주민활동이 발효되는 365 편리미엄 순창

○ 목표 : 365생활권 구축, 농촌정여건 개선, 농촌경쟁력 확보, 주민생활·활동여건 개선



[그림 3-5] 순창군 공간구상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1·2단계), 시군역량강화, 농촌집 고쳐주기,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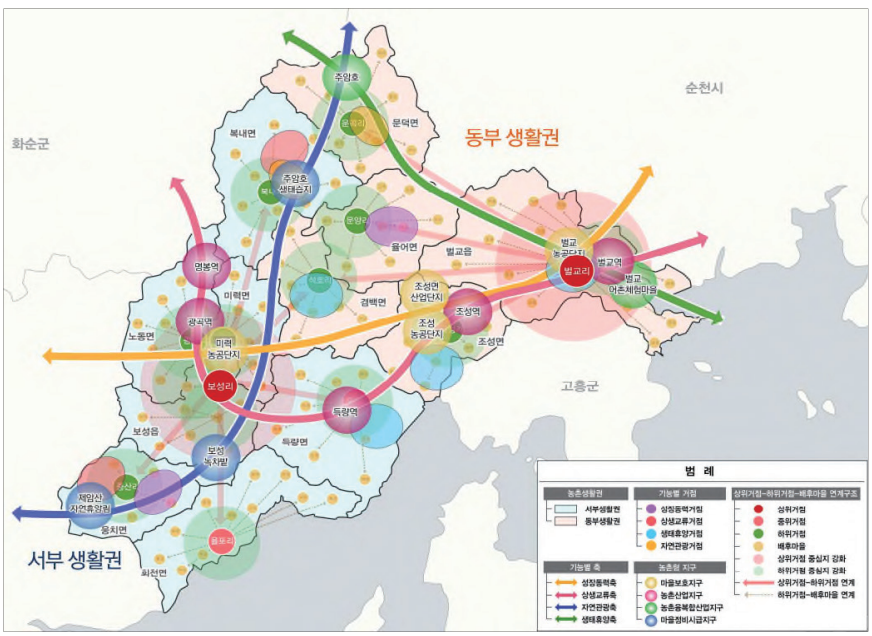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자율), 농촌신활력플러스, 치유농업테마공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생태주차장, 도시숲 조성,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 도시재생 뉴딜, 작은도서관 조성, 어린이집 확충

10) 전라북도 순창군(2021), 순창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⑥ 전라남도 보성군[11)]

○ 비전 : 장기적 밝은 미래를 꿈꾸는 365 행복농촌 보성

○ 목표 : 살기좋은 농촌, 상생하는 농촌, 활기찬 농촌



[그림 3-6] 보성군 공간구상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 슬레이트처리 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

11) 전라남도 보성군(2021), 보성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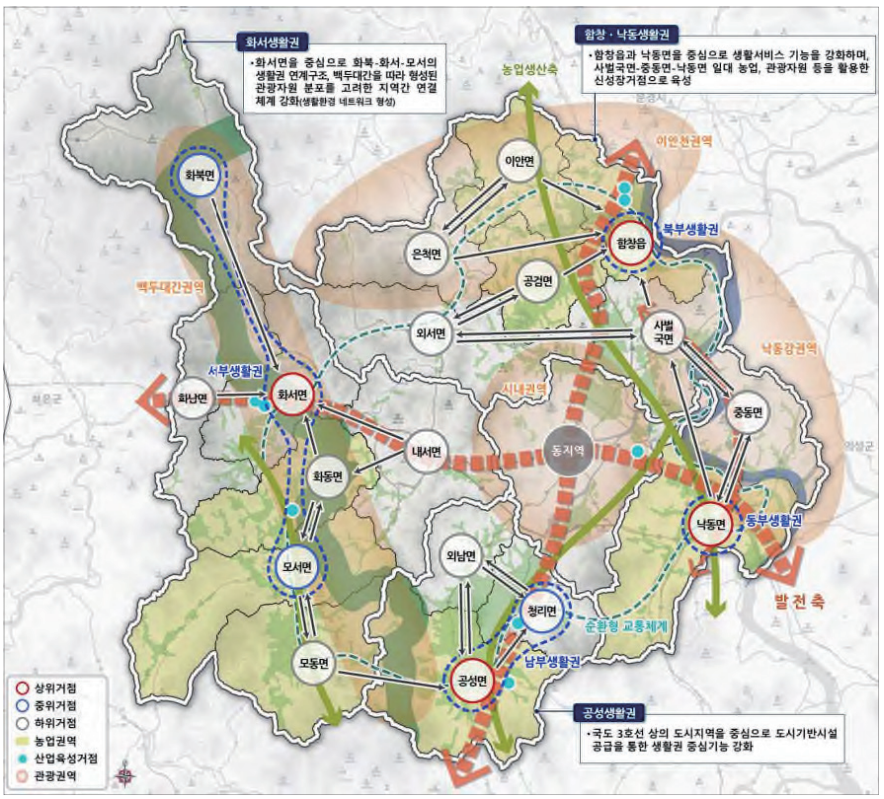
⑦ 경상북도 상주시[12)]

○ 비전 : 365 어울누림 상주

○ 목표 : 쾌적하고 행복한 농촌삶터 조성,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촌일터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농촌공동체터 조성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 복지회관 건립, 마을회관 시설보강 및 구조개선, 신재생에너지 복지시설 보급, 모바일헬스케어, 청년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공동주택, 신활력플러스, 어린이정원 조성 등



[그림 3-7] 상주시 공간구상

12) 경상북도 상주시(2021), 상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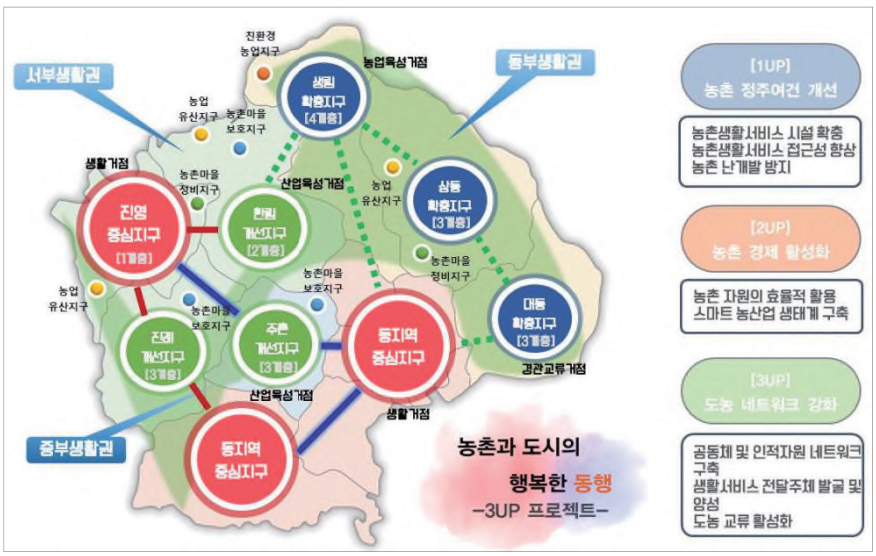
⑧ 경상남도 김해시[13)]

○ 비전 : 농촌과 도시의 행복한 동행 (3up 프로젝트)

○ 목표 : 농촌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도농네트워크 강화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경관보전직불,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 생활문화센터, 면사무소 건립, 대동스포츠센터, 귀농귀촌유치지원, 신활력플러스



[그림 3-8] 김해시 공간구상

13) 경상남도 김해시(2021), 김해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⑨ 경상남도 밀양시[14)]

○ 비전 : 365일 행복한 영남의 중심지, 밀양

○ 목표 : 더불어 사는 밀양삶터 조성, 균형발전 하는 밀양활력 창출, 공동체 회복 및 밀양 사회통합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농촌축제지원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 행정복지센터 신축, 생활SOC복합화,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재해위험지역정비, 비영리민단체공익활동지원

[그림 3-9] 밀양시 공간구상

14) 경상남도 밀양시(2021), 밀양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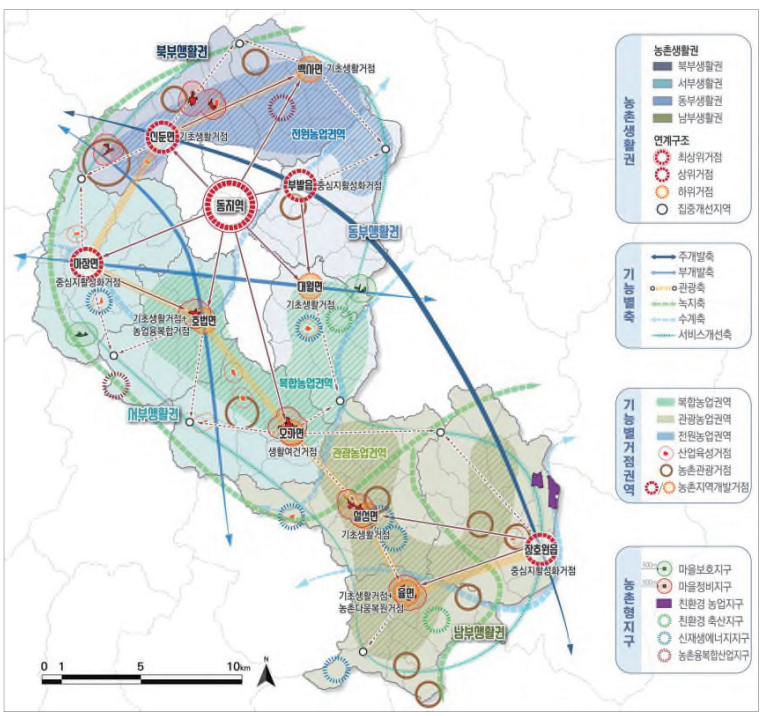
⑩ 경기도 이천시[15)]

○ 비전 : 구석구석 누리는 행복복지, 활력과 복합의 농촌공간

○ 목표 : 농촌다움의 재해석 편리한 농촌공간 실현, 지역특화 자원의 복합화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혁신, 농촌사회의 활력증진 따듯한 공동체문화 재건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집 고쳐주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 슬레이트처리,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소규모 서비스거점 조성, 주민자치회 시범, 도농교류·체험관광 지원, 귀촌인 농산업창원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청년상인육성, 청년공동체활성화지원, 신활력플러스 등



[그림 3-10] 이천시 공간구상

15) 경기도 이천시(2021), 이천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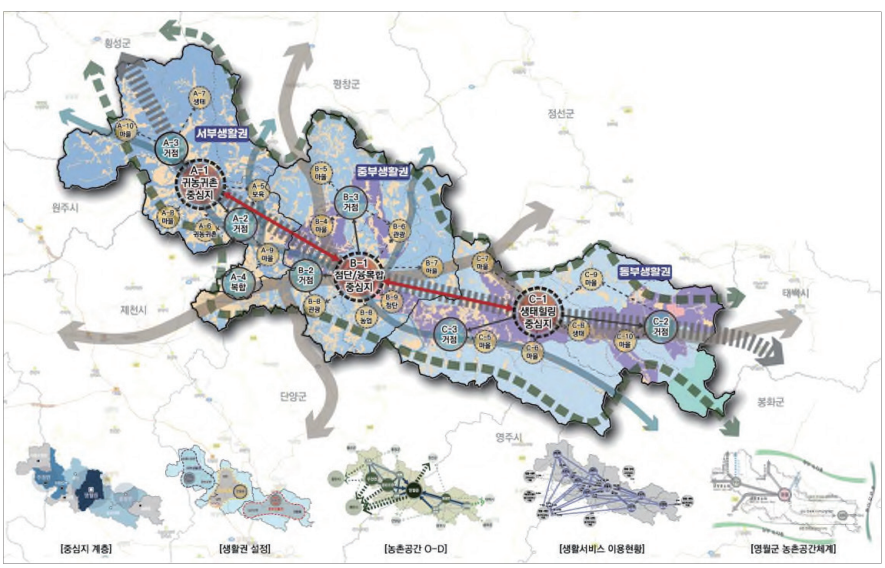
11 강원도 영월군[16)]

○ 비전 : 365일 살기 좋은 일상을 책임지는 '평생생활권 영월'

○ 목표 : (공간)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정주, (생활) 삶의 질 높은 일상생활, (경제) 지속 성장하는 영월사회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형교통모델,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뉴딜, 영월 문화도시 조성,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청·장년 일자리 창출, 119 아이돌봄터, 귀농귀촌유치지원, 희망택시 운영, 사회통합형 여성일자리 등



[그림 3-11] 영월군 공간구상

16) 강원도 영월군(2021), 영월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⑫ 충청북도 괴산군[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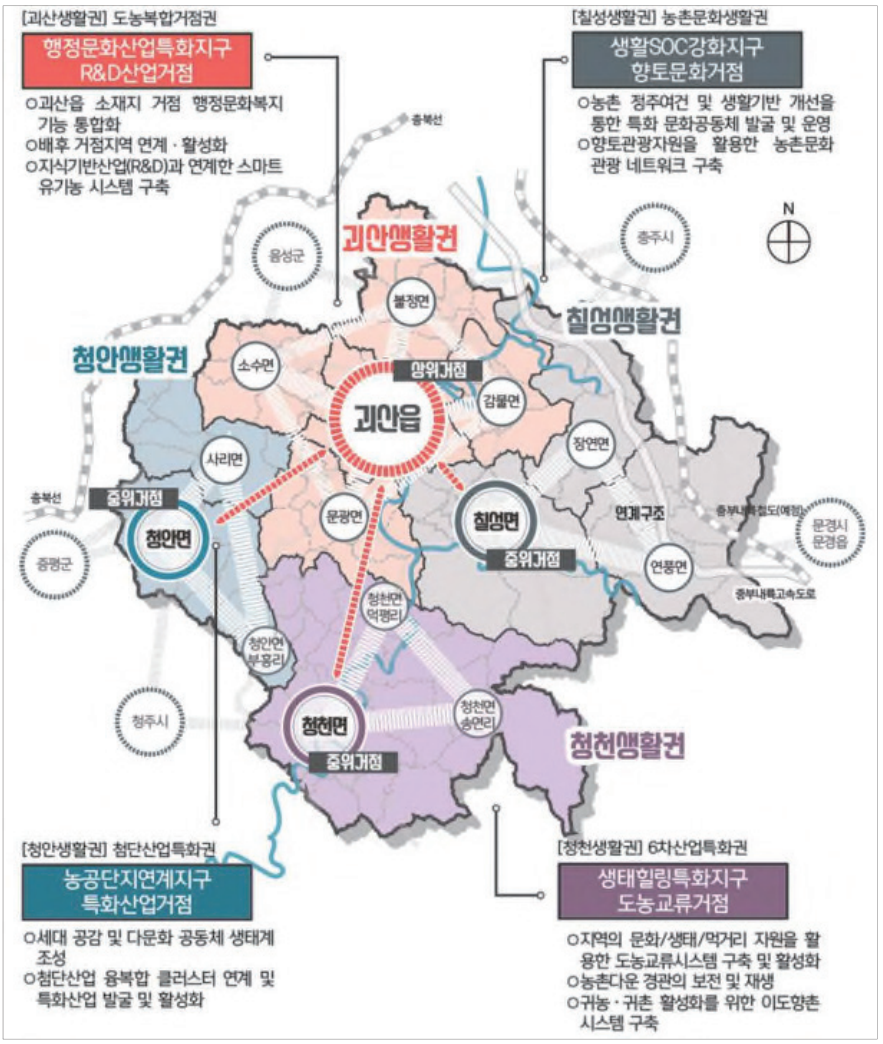
❍ 비전 : 2040 괴산군 도농복합 워라벨 행복공동체

❍ 목표 : (정주) 쾌적하고 여유로운 괴산, (공동체) 함께해서 행복한 괴산, (경제) 역동적이고 활기찬 괴산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형 교통모델,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 생활권 연계사업 : 마을만들기, 농촌재생뉴딜, 주거플랫폼 조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활력플러스,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산림복합단지 등

17) 충청북도 괴산군(2021), 괴산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그림 3-12] 괴산군 공간구상

2) 농촌협약 대상지구(2022~2026)

○ 2021년부터 본격적인 농촌협약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확대 시행함(대상지구 17개소, 예비지구 3개소)

○ 기본방향 : ′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시 군을 대상으로 농촌협약을 확대 시행

-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립한 통합계획이 중앙 지방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이행되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

○ 전제 조건 : 시 군은 협약 도입 신청 전 모든 전제조건을 이행

- 마을만들기 포함 이양사업 연계를 기획하며,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성 · 운영

○ 대상 시군 : 농촌협약을 통해 ′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복수의 농촌분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13개 시 군

○ 도입 절차 : 시군이 제출한 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을 평가하여 17개 시군을 대상 시군으로, 3개 시군을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

- 시 군은 지역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과 협약 대상 생활권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 신청, 중앙은 평가 후 협약 체결 시 군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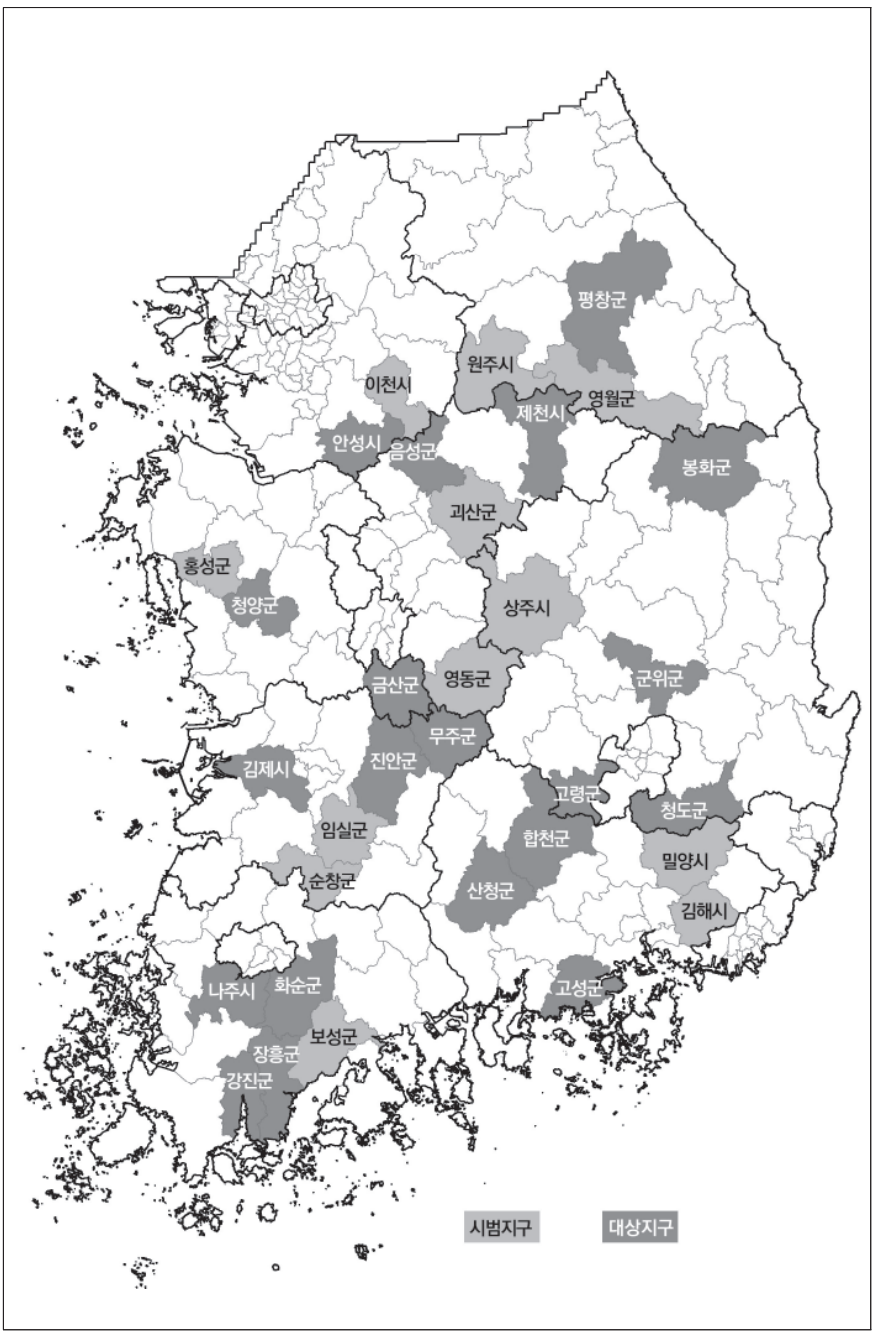
- 농식품부에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검토 조정 승인 후 협약 체결

○ 인센티브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 군(상위 10% 내외)에 협약 대상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

○ 향후 계획 : 선정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20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 체결

[표 3-2] ‘21년 대상지구 개요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상지구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나주시 화순군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
예비지구			음성군			장흥군 강진군		



[그림 3-13] 농촌협약 시범·대상 지구 위치도

2. 전라북도 농촌협약 추진현황

○ 전북 농촌협약은 ′20년에 시범지구로 임실군과 순창군 2개소가 선정되고, ′21년에 대상지구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3개소가 선정됨

- ′20년에 시범지구로 선정된 임실군과 순창군은 ′21년 7월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세부계획 준비 중

- ′21년 6월 대상지구로 선정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보완해 ′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 체결 준비 중

○ ′22년 대상지구 공모는 ′21년에 신청했던 남원시, 장수군, 부안군과 신규로 계획중인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등 총 7개소가 준비중임

[표 3-3] 전북 농촌협약 추진현황

구분	선정(′20년~′21년)	준비중(′22년 공모)
시범지구	임실군(′20), 순창군(′20)	
대상지구	김제시(′21), 진안군(′21), 무주군(′21)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1 김제시

○ 비전 : 사람중심, 지역중심,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김제시 희망농촌 리딜

○ 목표 : (정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촌공간의 재구성, 정주인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경제) 경제활력기반 구축 및 일자리 확충, 생태·문화·환경 농촌다움 회복, (공동체) 제도개선 및 공감대 확산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형 교통모델,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회적농업활성화, 로컬푸드직매장지원, 농촌유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촌공동체활성화, 농촌축제지원

○ 생활권 연계사업 : (정주) 도시재생뉴딜, 마을만들기, 스마트복합쉼터, 경로당 태양광 설치, (경제) 스마트빌리지 구축, 안전먹거리직거래장터 운영 등, (공동체)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청소년드림카드지원 등

[그림 3-14] 김제시 공간구상

2 진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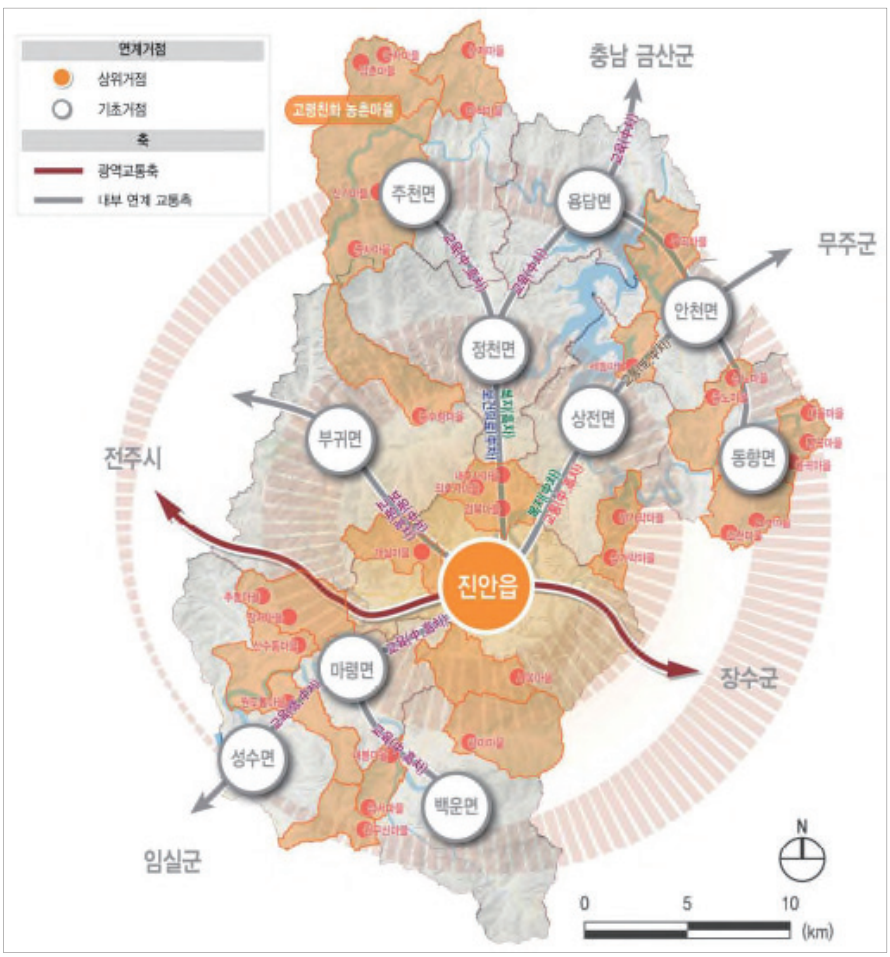
○ 비전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3/6/5 자립생활 네트워크, 진안!

○ 목표 : (정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365복합거점 조성, (경제) 지역거점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新성장동력 강화, (공동체) 사회통합 공동체 실현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형 교통모델,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 사회적기업 지원

○ 생활권 연계사업 : (정주) 도시재생사업, 군립도서관 건립, 가족센터 건립,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아토피치유마을, 체제형 가족농원, 농촌빈집정비, 신규

마을 조성, 농촌다움복원,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방문건강관리사업, (경제) 신활력 플러스, 명품홍삼집적화단지, 농촌재생 뉴딜, 산림소득 활성화, 친환경농업육성, 어촌 뉴딜 300등, (공동체) 맞춤형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농촌인력자원 활성화전문교육, 생생마을 플러스, 사회적기업 지원, 촌스런 마을여행 프로그램



[그림 3-15] 진안군 공간구상

③ 무주군

○ 비전 : 건강한 녹색심장, 행복한 무주 ING

○ 목표 : (정주) 건강한 쉼터_살만한 무주를 넘어 살고 싶은 무주로, (자연) 건강한 쉼터_무주군민의 생활쉼터이자 전 국민의 친환경 쉼터, (경제) 건강한 일터_친환경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 생태계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교통모델, 농촌재생뉴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시군역량강화, 신활력플러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시군역량강화, 사회적농업활성화, 마을만들기

○ 생활권 연계사업 : (정주) 도시재생인정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경제)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칠연 생태관광 활성화, 금강 관광자원 활성화, 남대천 경관조성

[그림 3-16] 무주군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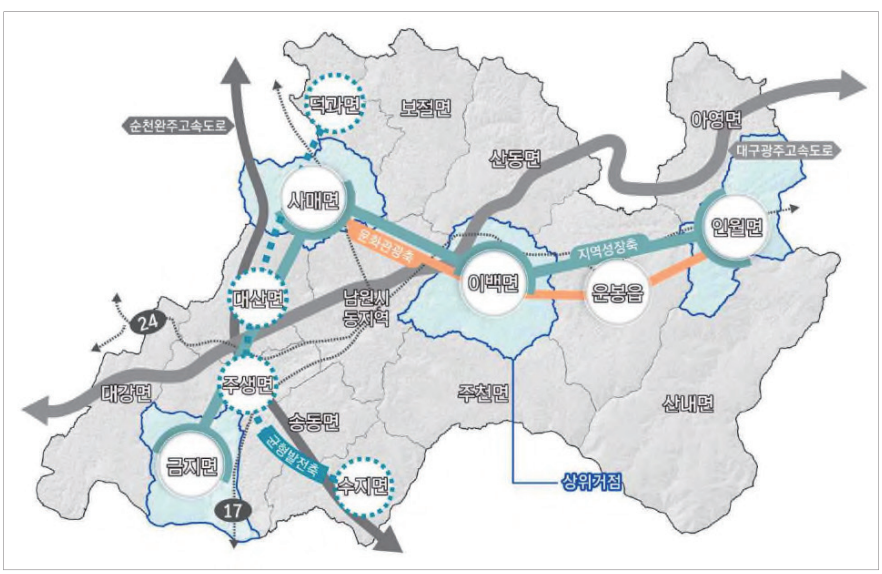
④ 남원시

○ 비전 :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 및 공동체 육성, 같이 남원

○ 목표 : (정주) 살맛나는 남원_살기좋은 남원 농촌생활권 구현, (경제) 돌아오고 싶은 남원_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 (공동체) 함께하는 남원_소통과 조화의 생활공동체조성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축제 지원, 시군역량강화, 농촌재생 뉴딜

○ 생활권 연계사업 : (정주) 마을만들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근로자 행복주택, (경제) 그린키즈식품사업 육성, 농촌관광프로그램, 농촌활력프로그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공동체) 신활력플러스,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유토피아, IC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탄소중립 자원순환



[그림 3-17] 남원시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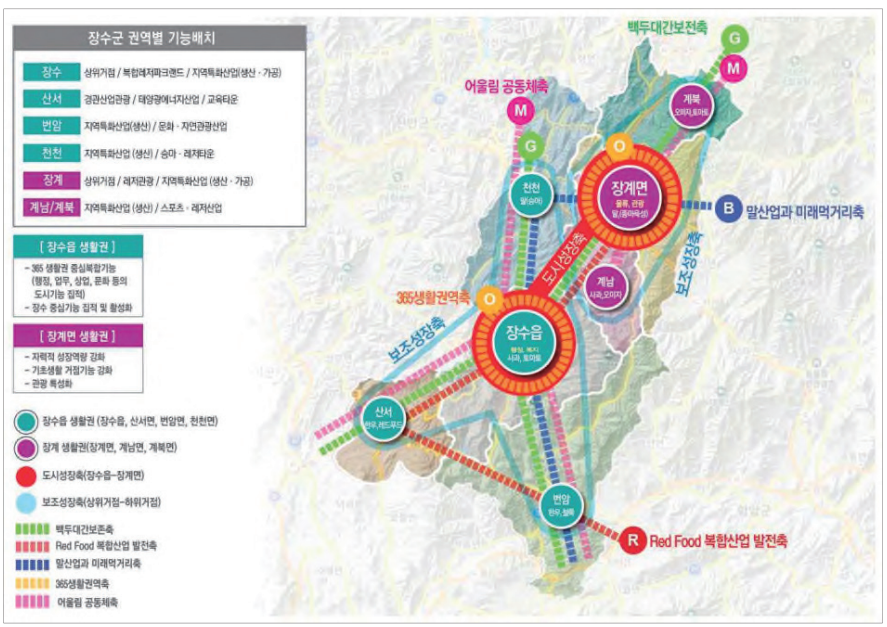
⑤ 장수군

○ 비전 : 색다른 친환경 레드푸드 장수! 모두가 행복하고 넘치는 활력의 장수!

○ 목표 : (정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65 생활권 활성화, (경제) 지역중심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지원기반 구축, (공동체) 지역 주민들간의 소통과 어울림 공동체 활성화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동식 놀이교실, 농촌형 교통모델,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시군역량강화

○ 생활권 연계사업 : (정주) 종합체육관 건립, 노인요양병원 건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확충, 도시재생 뉴딜, 맞춤형 공공주택지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농촌주책 개량 및 빈집정비, 스마트 그린도시, 마을만들기, (경제) 신활력플러스, 말산업육성 지원, 소규모 6차사업화 지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지역특화림 조성, 치유의 숲 조성,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구축 운영 지원,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조성



[그림 3-18] 장수군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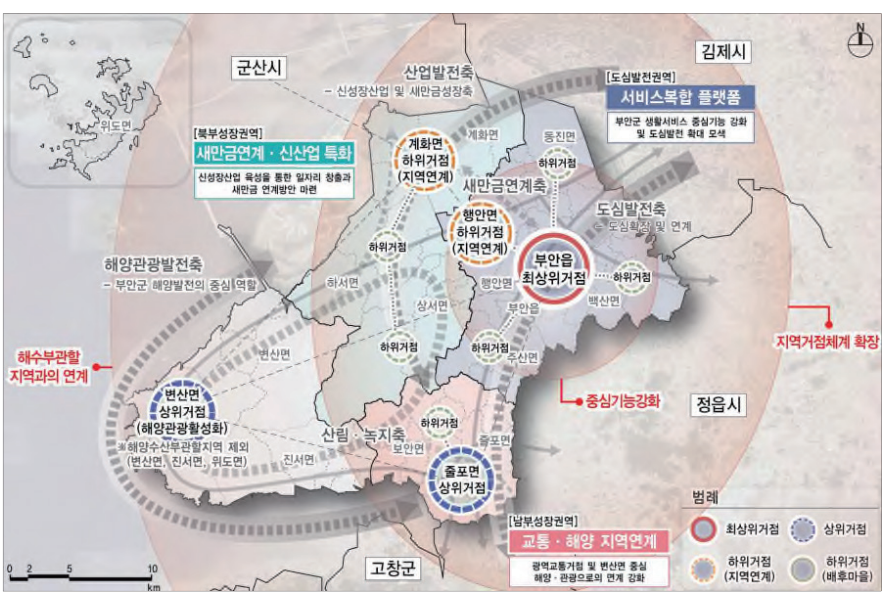
⑥ 부안군

○ 비전 : 청정하고 활기 넘치는 미래가치 공유, 부안다운 일상으로 모두를 품어 안는 365 행복도시 부안

○ 목표 : (정주) 365 생활서비스 거점체계 구축, (경제) 특화자원 연계 지역경쟁력 확보, (공동체) 민관 통합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생활권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집 고쳐주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촌관광활성화지원, 시군역량강화, 신활력플러스

○ 생활권 연계사업 : (정주) 마을만들기,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촌형교통모델, 농촌다움복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경제) 귀농귀촌유치 지원,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지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돌봄공동체 지원



[그림 3-19] 김제시 공간구상

3. 주요 개선 과제

○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목차에서 체크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검토

[표 3-4] 주요 개선과제 검토 항목

구분	세부 목차	검토항목
농촌공간 전략계획	계획의 개요	배경 및 목적의 명료성, 지역특성 반영, 계획수립 경위
	일반현황	광역적 입지, 생활권과 연계한 자연환경 검토, 인구분석의 세분화, 산업경제·생활SOC 등 지역현황의 세분화 및 원인분석, 배후마을 고려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상위계획 검토, 인접지역 검토, 계층구조 및 생활서비시스 등의 생활권 형성 연계, 종합 검토
	계획의 기본방향	비전·목표·전략의 논리적 연계, 축·권역·거점 등의 타당성, 지역문제와 추진과제의 연계성, 지표 설정 및 관리
	농촌생활권 발전계획	생활권 우선순위 설정(프로그램 고려), 거점 위계별 연계, 생활권 연계, 농촌공간 정비 수단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재원확보, 지역공동체 참여,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공간전략계획과의 정합성, 거점별 추진과제, 성과지표의 객관성, 지역특성 및 개선과제를 고려한 방향설정
	사업계획	기존 시설 및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사업내용의 구체화
	이행관리 및 성과관리 계획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 세부 운영규정,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의 구체화

1) 농촌공간 전략계획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의 필요성 부문에서 지역적 특성 반영이 미흡하며, 계획의 성격 규명에서 추상적인 문구가 다수 포함되어 명료성 저하

○ 계획수립 체계에서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방향이 모호하며, 계획수립 경위는 계획수립 단계별 정리 미흡

2 일반현황

- 입지여건과 관련된 도면은 주변의 고차서비스 지역과 광역교통망 등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형·지세, 수계·하천 등의 자연환경은 생활권 구분과 연계한 검토 부족

- 인문환경의 인구분석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현황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밀도, 인구이동, 인구위기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고,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 검토 필요

- 산업경제 현황은 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부족하며, 지역경제 및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미흡

- 사회간접시설은 빈집 증가 지역과 밀집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이 미흡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세분화(개선지역, 불편지역, 공백지역 등) 필요

- 생활 SOC 시설은 11개 서비스 기능시설의 고차(중차)·저차별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정리 미흡

- 문화관광 자원은 발전잠재력, 자원화 등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관광수요의 세분화된 분석 필요

- 지역공동체 및 인적자원의 지역 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관련 현황 분석 미흡

3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이 적은 상위계획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공통적인 키워드 도출 노력 필요

- 대내외 여건 부문에서 농업·농촌 분야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등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 미흡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부처별, 사업유형별, 공간별, 단계별 등으로 구분한 분석체계와 정량·정성 지표에 기반한 성과 정리 필요

○ 계층구조 분석시 중심지수 차이에 대한 특성 및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결과를 생활권 형성과 연계시키는 노력 미흡

○ 생활서비스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는 중점개선 분야에 대한 서비스 위계별 분석이 미흡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은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세부 분석 부족

○ 농촌공간 구조 부문에서는 일반현황, 상위계획, 생활서비스 분석 등 관련 내용의 종합적 표현 미흡

4 계획의 기본방향

○ 비전 설정시 지역의 특성이 표현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비전에 대한 의미 또는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으로 연계되는 논리 미흡

○ 생활권 설정단계에서는 현황 및 여건분석에 검토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농촌공간 구조에서 기능별 축, 거점 권역 설정 등에 대한 해석 미흡

○ 세부추진과제는 문제점 및 지역이슈를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로 도출하는 접근 필요

○ 주요지표는 목표와 세부 부문을 고려한 정량정성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 필요

5 농촌생활권 발전계획

○ 일반현황 및 여건,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부문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며, 생활권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정리 필요

○ 생활권 우선순위 설정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외에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 또한 검토 필요

○ 상위거점에서 배후마을로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지역 내 공동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미흡

○ 생활권 간 연계를 위해 서비스 전달, 균형발전, 인접 시군의 고차서비스 활용 등에 대한 검토 부족

○ 농촌공간 정비는 축사, 태양광 등 혐오시설 정비 외에 빈집정비, 과소화마을 정비, 지역 내 관련 조례 정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필요

5 투자 및 관리운영 계획

○ 재정부문 변화 추이 분석에 기반 해 현 시점의 지역재정 여건 검토가 필요하며, 생활권 연계사업의 관련부처 및 민간투자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중요

○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자립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2)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

1 기본구상

○ 농촌공간 전략계획의 비전·목표 등과의 정합성 확보가 부족하며, 상위·중위·기초 거점별 발전방향을 고려한 추진과제 제시 미흡

○ 성과지표는 생활권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추진과제 설정시 거점 기능 강화 및 거점 간 연계, 거점 위계별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고려 필요

○ 사업은 기 추진사업 검토 후 방향설정(비전·목표·전략)과 연계되는 논리 속에서 선정하고, 생활권 내 주요 문제점 개선과 연계 강화 필요

2 사업계획

○ 사업계획은 기존 유사 사업 및 시설 등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가 미흡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으로 구분 검토

○ 사업내용 부문에서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외에 사업추진 로드맵, 서비스 대상자, 지역 내 연계조직 등에 대한 내용 부족

○ 중심지활성화 또는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을 기 추진하는 지역은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3 이행관리 및 성과관리 계획

○ 운영관리계획 수립시 지역 내 공동체, 주민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한 노력 부족

○ 거버넌스 기구(의결, 협의, 실행, 지원 등) 주체별 구성과 역할, 기능 외에도 세부 운영규정을 명확히 설정 필요

○ 사후관리는 시군의 각종 관련 조례의 활용방안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핵심 주체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고민 미흡

○ 모니터링 체계 부문에서 사업관리와 성과관리의 구분이 모호하고, 평가 이후 환류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

제4장

농촌협약 계획 대응 방안

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2.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3. 농촌협약 연계사업

제 4 장 농촌협약 계획 대응 방안

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 농촌공간 전략계획(20년) 수립시 요구되는 목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살펴보고,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세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제시

-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 등의 의견 수렴 진행

○ 농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공간 전략계획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표 4-1] 농촌공간 전략계획 목차

Ⅰ.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3.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2. 계획의 범위 4. 계획수립 경위 및 방법
Ⅱ.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1. 일반현황 (자연지리, 인문사회,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간접자본, 공동체 등) 3. 대내외 여건변화 5. 정책수요 조사분석	2. 농촌 공간구조 분석 (축, 거점지구, 서비스이용, 토지이용, 난개발요소 등) 4. 상위·관련 계획 검토 6.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Ⅲ. 기본구상	1. 기본방향 설정 3. 농촌생활권 설정	2. 농촌공간 구상
Ⅳ. 생활권 발전계획	1. 생활권 발전방안	2. 우선 농촌생활권 설정
Ⅴ. 거버넌스 구축 및 투자관리계획	1.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3. 성과관리 계획	2. 재정 투자·운용 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1.11

1) 배경 및 목적

○ 배경 : 정책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작성

○ 필요성 : 지역적 배경은 지역 농촌의 공간구조, 인구, 지역경제, 생활권, 거버넌스 등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작성

○ 목적 : 비전 및 목표와 연계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강조하여 작성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 전략계획의 대상 기간을 제시

○ 공간적 범위: 전략계획의 대상 지역(예: 시 군의 위치 등)

○ 내용적 범위: 전략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의 범위(예: 공간 이용, 산업 육성 등)

○ 전라북도 광역 맵과 시군의 읍면동 명칭이 표기된 도면 작성

○ 시군 맵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작성

3) 계획의 성격 및 수립 체계

① 계획의 성격

○ 시군의 농촌공간에 대한 20년 단위의 장기 발전계획으로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정비,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지역 전반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계획

○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로 배후마을~하위거점~상위거점 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마을과 각 중심지간 연계 강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삶의 질 향상 계획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가급적 기존의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

- 농촌공간계획, 중장기 계획(20년), 관리계획(단위사업의 방향 제시 등), 실천계획, 통합계획 등 본 계획만의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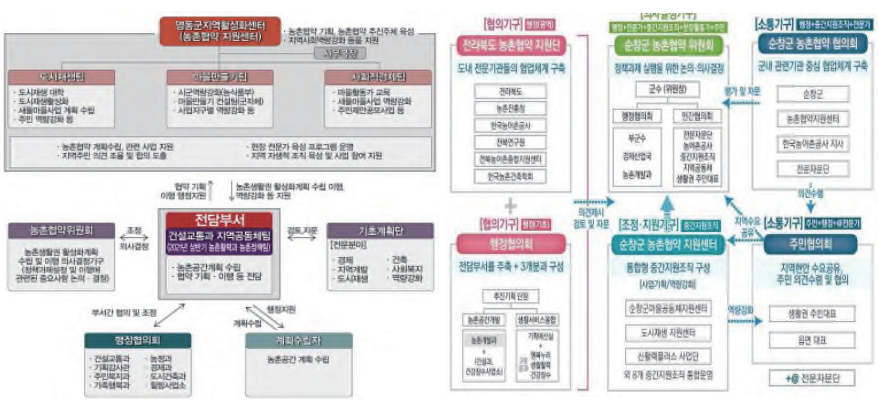
※ 합리적 계획, 미래지향적 계획 등 추상적인 문구 지양

② 계획의 수립 체계

○ 지자체(광역·기초) 농촌협약 협의회, 농촌협약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용역사, 공공기관 등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기능 등을 명시

○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 내 주체들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시

○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을 실행·지원 기구, 협의기구, 의결기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표(농촌협약 협의회 구성 및 역할)와 모식도(농촌협약 거버넌스 조직 및 추진체계)로 표현(운영시기 포함)



4) 계획수립 경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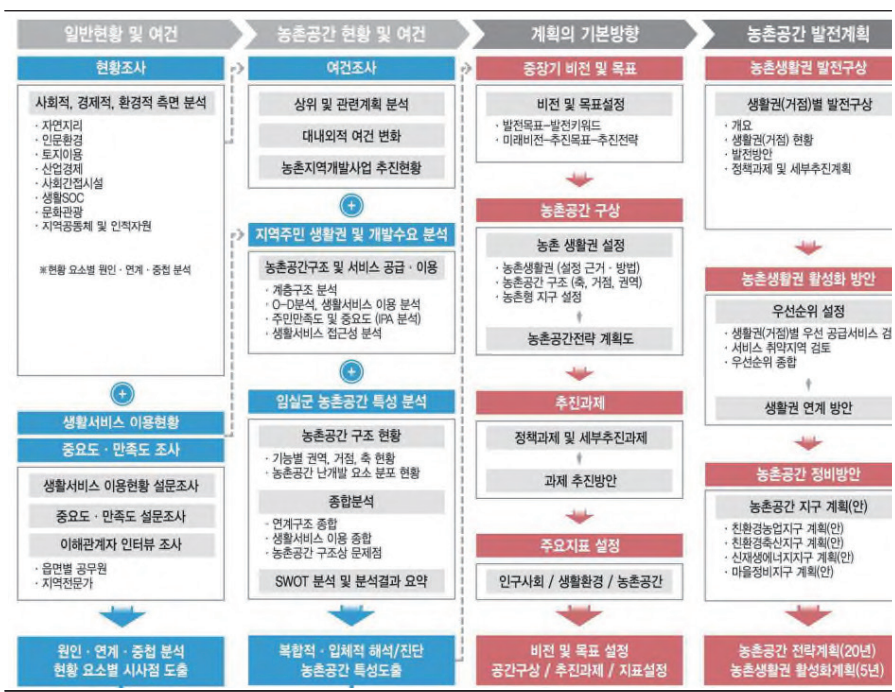
○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지역공동체, 주민 등 지역사회 대상 의견수렴 횟수, 대상, 내용, 제시된 의견의 주요 내용 등을 서술

○ 조사분석, 생활권 구분, 대안 작성, 기본구상, 계획수립 등 절차를 제시

○ 경위 : 지역주민 협의, 협의회 운영, 관계기관 협의 등을 중심으로 작성 또는 계획수립 단계별 정리

○ 과정 : 목차별 세부 내용을 프로세스별로 정리

○ 방법 : 문헌조사, 현지실사, 의견수렴(공무원, 지역주민 등), 설문조사 등 정리



1) 일반현황

1 자연·지리

○ 해당 읍면과 시군의 위치 및 면적, 광역교통체계, 지형·지세, 수계·하천, 해안·간척지, 생태축·생태자연도 등 자연·지리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

○ 시군, 읍면, 행정리 등 행정구역이 표시된 위치도와 지형도,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중첩하여 제시 가능

① 입지여건

○ 위치 : 광역적 입지를 표현하고, 주변의 고차서비스가 가능한 거점도시 표기 및 거리 이격 현황이 나타나도록 표현

- 면적 : 읍·면·동(시 지역) 지역의 면적 및 비율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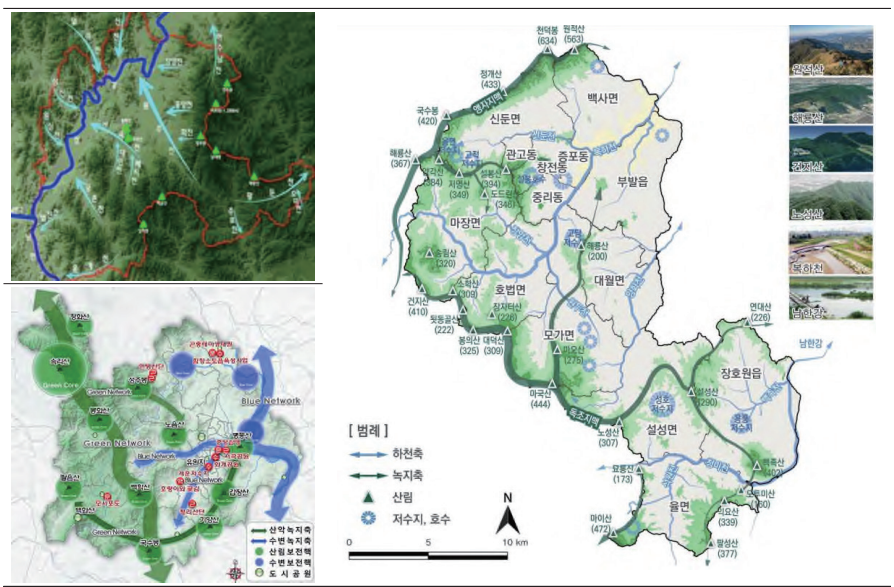
- 도로망 : 행정구역 주변의 광역교통망이 나타나도록 작성, KTX역, 고속도로 IC, 공항, 항만 등 광역교통거점 표기, 국가계획에서 확정된 교통망 표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함께 표기

② 자연환경

- 지형·지세 : 단순한 지형·지세 분포 설명은 지양하고, 산맥, 산림 등이 생활권 형성에 미치는 지역만의 특성 등 공간구조 중심으로 기술 (산지 축, 녹지 축 등을 도면에 표현)

- 수계·하천 등 : 수맥, 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지역의 공간특성 기술(주 수계 축 등을 도면에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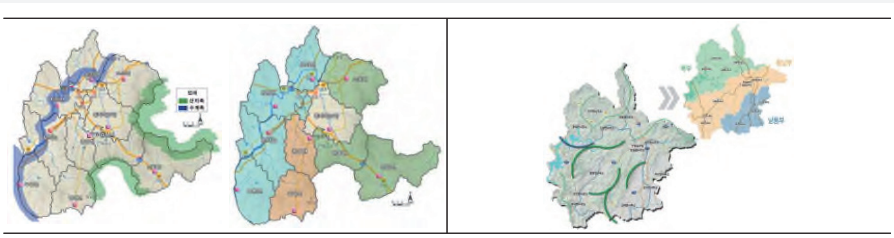
- 생태계 : 보존지역과 개발가능지역 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분포 특성 기술, 지역 내 생태 축과 생태계 우수 지역 등을 표현



③ 소결

- 자연·지리 부문의 특성을 정리하고 생활권 형성 등과 관련된 공간구조 요약

- (예) 교통망, 표고 및 경사, 수계, 생태계 등에 의한 공간 분할



2 인문사회

① 행정구역

❍ 해당 시군의 읍면동별 인구, 인구밀도, 인구이동, 귀농귀촌, 가구, 다문화가정 등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연령별, 성별 등으로 구분)

❍ 행정구역 :읍·면·동 현황을 작성하되 동 지역은 법정동 및 행정동, 리 지역은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개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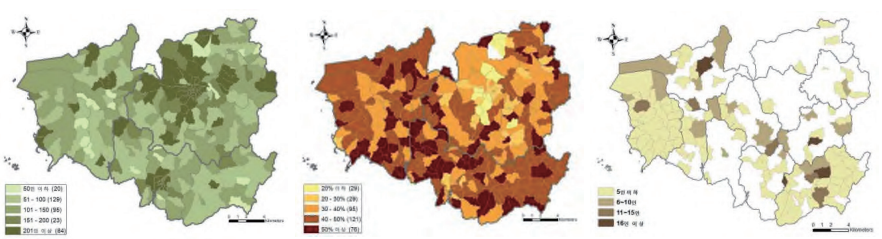
② 인문·가구

❍ 인구·가구 현황은 최근 30년간의 인구총조사(5년 단위) 자료를 사용하고, 행정리 인구는 시군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

- 시군 전체 상위거점(중심지) 하위거점(기초거점) 배후마을로 구분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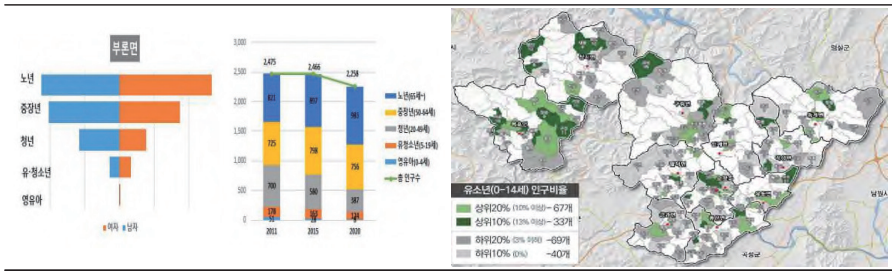
❍ 인구규모 : 인구, 가구, 귀농귀촌, 다문화가구 등(읍면동별 현황 및 추이)

- 인구증감에 대한 요인을 읍면동 단위로 사회증감(전입·전출)과 자연증감(출생·사망)으로 구분하여 분석
- 특히 인구감소는 합계출산율(저출산·초저출산·극저출산)과 연계해 분석
- 사회증감 중 전입은 귀농귀촌, 다문화가구, 외국인 등을 추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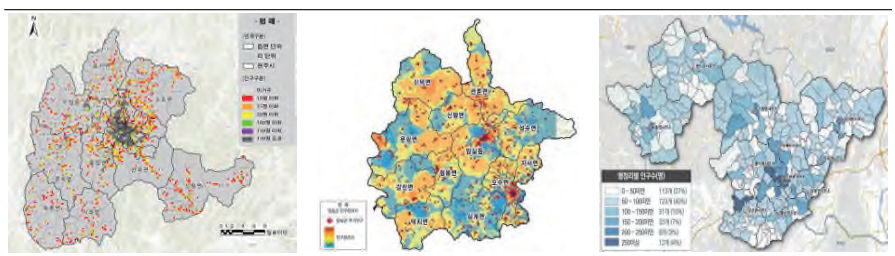


행정리별 인구 노인인구비율 귀농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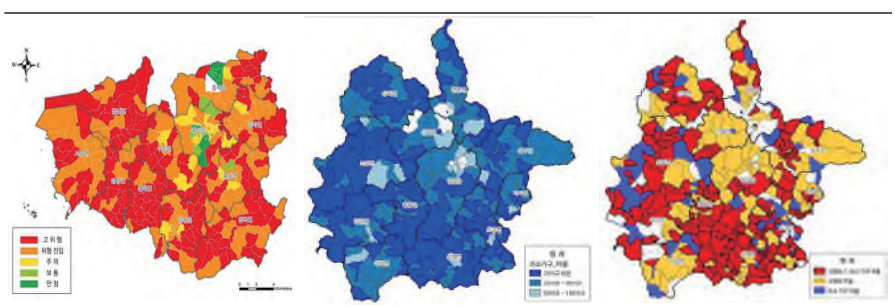
- 인구구조 : 유소년, 경제활동인구, 노년 등(읍면동별 현황 및 추이)
- 경제활동인구는 청년과 중장년을 구분하여 분석(청년인구 기준은 도 및 시군 조례 참조)



- 인구밀도 :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등 지역 내 인구분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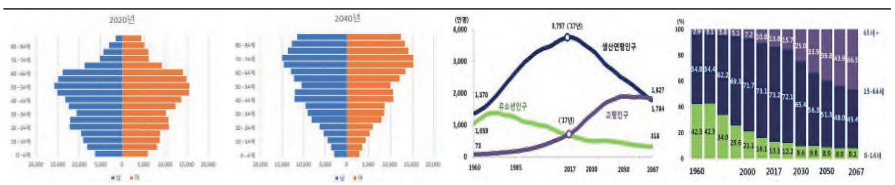
- 인구이동 : 읍면동별 전입·전출에 기반한 순이동 분석(시군·시도내·시도간)
- 인구위기 : 고령화, 과소화마을, 지역소멸위험 등의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도면에 표기(마을별 분석 검토)
- 필요시 고령화, 과소화, 지역소멸 등 중첩 분석



지역소멸위험지수 마을별 과소화 마을별 고령화&과소화

○ 인구가구 전망은 향후 30년 간의 장래인구 가구 추정치를 제시(추정방법 또는 출처를 표기)하고,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을 추가

- 시군 전체 상위거점(중심지) 하위거점(기초거점) 배후마을로 구분하여 제시
- 인구감소,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을 고려하여 과소화 가능 지역을 도출
- 읍면별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위기와 관련된 추정치를 제시하고, 인구전망에 따른 설명 기술
- 사회증감의 경우 세부 요인별로 법정계획 등에서 명시한 외부유입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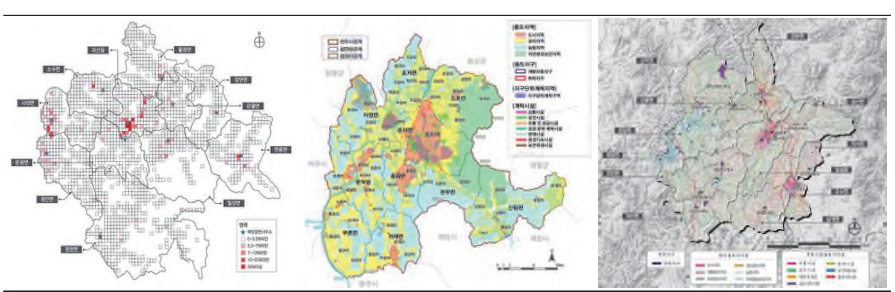


③ 토지이용

○ 도시 군 기본 관리계획을 근거로 용도지역·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 등 현황, 최근 변화 추이와 특성 등을 제시

○ 읍면별 지정현황도를 제시, 현황도는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취락지구, 토지이용계획시설 등을 종합도면으로 표현



④ 소결

- 인구 증가 및 감소 지역, 과소화지역 등 인구와 관련된 지역 특성을 표 및 도면으로 표현
- 토지이용 변화 특성에 기반한 공간구조 변화 및 개발 축 등을 도면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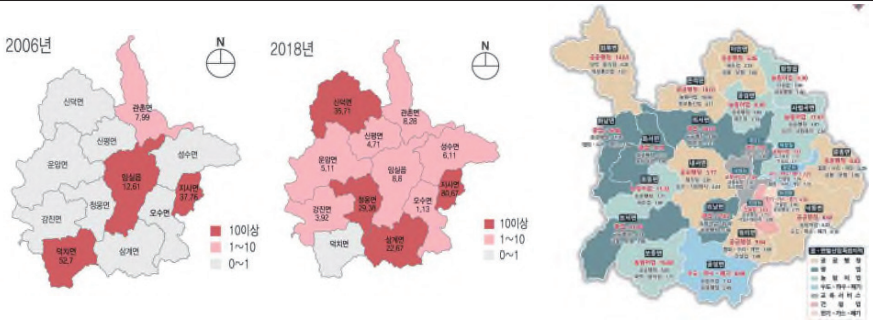
3 산업·경제

❍ 해당 시 군의 산업 경제 현황과 추이를 항목별로 기술

- 시 군의 경제규모(지역총생산 통계청 자료 기준), 산업구조, 산업특화도(LQ, 소분류 이하 기준) 등
- 주요 산업별 경제규모, 주요 산업별로 업종별 조직형태별 사업체 종사자수, 고용률, 취업자수, 경제활동 인구 등 해당 지역의 산업 경제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

❍ 지역내 총생산은 산업별(1차/2차/3차, 농림어업/건설업/광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분석하고, 사업체 및 종사자는 읍면동별 변화추이 분석

❍ 지역총생산 증감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성장산업 도출)



농림어업 산업특화 변화도 읍면별 산업특화도

○ 특화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관련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내용 기술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특화전략 및 향토 산업, 전통시장 등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

○ 산업구조 및 산업특화도와 특화전략산업·향토산업의 연관성 검토

○ 지역내 6차산업 현황 분석(인증업체, 참여인력, 주요품목 등)

○ 읍면동이 표기된 도면에 특화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거점과 지역경제 또는 지역산업 발전 축 등을 표기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명

④ 문화관광

○ 자연자원: 시군의 대표 자연경관 자원(예, 8경·10경) 등을 시군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제시하고, 출처 기재

○ 역사문화자원: 문화재지정현황, 문화시설 현황 등을 읍면별로 공간분포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등 개발행위 가능성을 분석 제시

○ 축제 및 행사: 시군에서 추진되는 민·관이 주도 축제·행사 등을 개최년도, 시기, 주관, 주요내용, 효과 등을 기재

○ 관광수요: 관광지 지정 현황, 방문객수 현황. 관광사업체 현황 등을 기재

- 자연·역사문화 자산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자원개발이 양호한 대상과 발전잠재력이 높지만 자원화가 미흡한 대상을 구분
- 관광수요는 시군 내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 계절적 분포, 내·외부 관광객, 방문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5 사회간접자본

① 주택

○ 해당 시 군의 주택 수, 주택 유형, 주택보급률, 노후주택비율, 빈집 현황 등 주거시설 관련 현황을 제시(가급적 읍 면별로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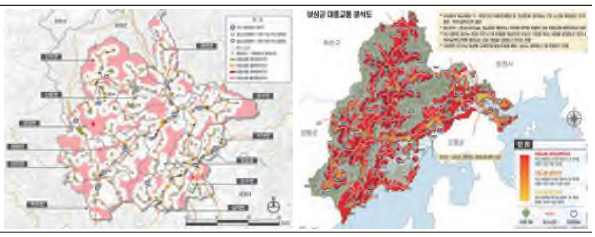
- 최근들어 빈집이 증가하는 읍면과 빈집이 밀집된 지역 분석
- 건축물 노후도 및 빈집 현황 등을 중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도출

② 도로 및 교통

○ 해당 시 군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도로 총연장, 포장률,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에 대한 현황을 제시

- 교통체계 : 농산어촌 및 오지마을 교통 현황 , 지자체 내부 중심 생활지역과 배후마을과의 교통 현황,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인접 시군 중심 생활지역과의 교통체계 등을 분석
- 주차 : 주차 수용능력이 부족한 지역과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분석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취약지역과 고차(중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분석
-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시내버스·공영버스·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현황 분석을 통해 교통사각지대(개선지역, 불편지역, 공백지역 등) 도출
-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은 버스정류장 반경을 기준으로 한 취락지구의 일일 운행회수 등을 검토

대중교통 노선 빈도



대중교통 사각지대

③ 생활 SOC·환경시설

○ 해당 시 군의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시설의 보급률, 이용·공급 현황을 제시

- 전기·가스·상하수도 보급률 및 이용·공급 현황 외에 읍면별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율 등을 분석

○ 해당 시 군의 생활폐기물, 음식물 등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시

6 지역공동체 및 인적 현황

○ 해당 시 군에서 보유한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기관 조직의 경우 구성 현황, 운영 활동 실적 등을 포함)를 제시하되, 향후 농촌생활권 발전전략과 연계된 자원을 중심으로 기술

○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문화 복지 교육 등 지역사회 기반으로 구성된 기관 조직

- 지역 공동체의 단순 현황 등 개요 정리보다는 지역 내에서 기능과 역할, 운영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
- 지역 공동체 분석 대상은 도시재생(국토부), 관광두레(문체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부), 귀농귀촌(농식품부) 등 포괄적 접근

○ 서비스 공급 전달주체: 시 군 내에서 읍 면소재지 서비스 거점으로부터 배후마을로 문화복지 교육 등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조직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내용, 방식, 빈도, 수혜범위 등을 조사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방향 검토

○ 현장활동가 전문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수립 이행 과정에서 참여 가능한 인적 자원

- 인적자원은 농촌에서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읍면별로 농촌협약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단체를 조사하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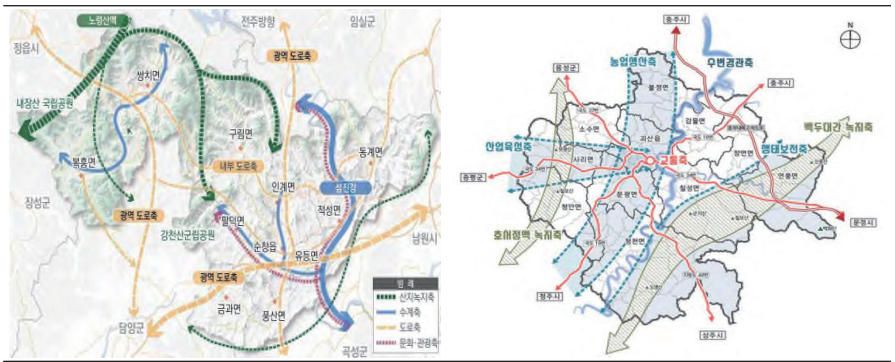
- 일반현황 및 여건에 대한 종합분석 정리(부문별 또는 읍면별)

2) 농촌공간구조 분석

1 기능별 축 및 거점지구

○ 이미 형성되어 실재하고 있는 기능별 축(발전축, 교통축, 녹지축, 농촌다움 보전축, 농업생산축 등), 기능별 거점 권역(농업, 농촌다움 보전/경관/생태, 산업 육성, 교류관광 등) 등을 제시

-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시도종합계획 등), 일반현황(자연·인문·산업·사회간접시설 등), 생활서비스 공급·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능 축, 기능별 거점 및 거점지구를 종합적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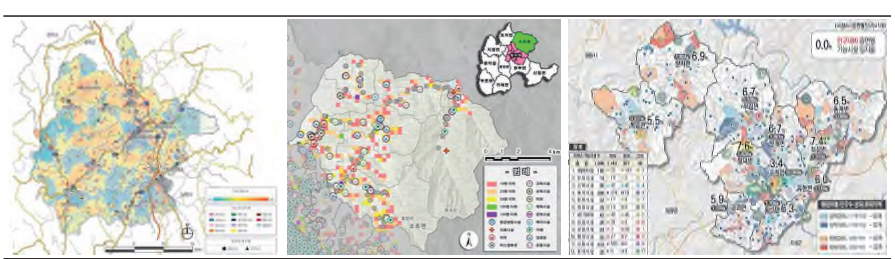
2 농촌 공간구조 및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① 생활 SOC 분포

❍ 해당 시 군의 각 읍 면 동별로 운영 중인 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해 11가지(보육,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보건 의료, 상업, 금융, 교통, 행정, 휴게시설 등)로 구분하여 작성(시·도, 시·군, 중앙부처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자료 등을 활용)

- 서비스 기능 유형은 필요시 추가 가능(예: 주거, 안전, 생활편의시설(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환경(하수도) 등)

- 시군 전체 및 읍면별로 11개 서비스 기능시설의 세부항목(고차(중차)·저차)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제시
- 서비스 기능시설 분석시 시설 수 기준 외에 인구대비 시설 수 기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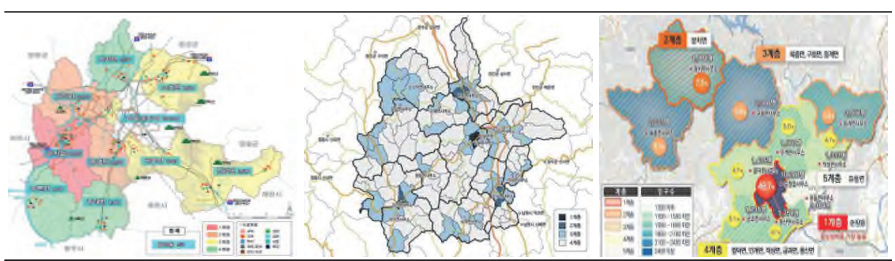
시군 서비스 시설 분포 | 읍면 서비스시설 분포 | 인구대비 서비스시설 입지율

② 중심지 계층 구분 및 기능분석

○ (직접 조사분석) 농촌중심지별 기능 수행의 정도와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 내 동지역, 읍면소재지,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시설 수를 조사하여 데이비스(W.K.D. Davies)의 기능지수법 등을 사용하여 중심기능지수를 구한 후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층 구분

○ (국토지리정보원의 격자형 자료 활용) 인구밀도, 생활서비스시설 밀도, 지가분포도를 중첩하여 중심지/거점 파악 및 계층 구분

- 중심성 분석시 생활권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 농촌생활서비스 11개 항목 외에 주유소, 카센터, 세탁소, 이미용업, 목욕업 등 생활편의시설 추가 검토
-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가정보′ 등을 활용
- 중심성 분석 후 지수가 높게 도출된 읍면에 대한 특성과 원인 등을 설명하고, 계층에 따른 읍면별 인구규모 제시 및 인구규모에 따른 중심성 비교
- 1계층과 2계층은 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로 중심성을 심층 분석
- 기능별(생활서비스) 계층구조가 읍면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기술



③ 연계구조/농촌주민생활권 분석

○ (기존자료 활용) 국토교통 DB의 목적별 통행량, 이동통신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군 간·시군 내·읍면동 간 연계구조 분석, 필요시 선택적으로 사용

○ (조사자료 활용) 농촌지역 주민의 상품 구매 및 서비스 ɟ용 행태를 조사하여 각각의 이용권을 분석하고 중첩하여 종합

- 지역별(읍면 자체, 관내 읍면간, 타 시군간), 주간대별(주중, 주말), 연령대별(비중 높은 연령대), 년도별(최근 3개년)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동현황에 대한 특성과 원인을 연계구조 및 생활권 형성 측면에서 설명

- 중심성지수와 이동현황 결과를 종합하여 도면으로 표현

④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 각 마을(마을회관 기준)로부터 중심지에 분포한 생활서비스시설까지의 물리적 거리, 이용교통수단, 시간거리 등을 분석하고 생활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을 파악

❍ 365생활권의 기준, 농어촌서비스 기준,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대상시설 및 국가최저기준 등과 비교하여 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제시

- 365 생활권 기준 : 기초생활서비스 30분, 복합서비스 60분, 응급상황 대응 5분
- 농어촌서비스 기준 : 응급의료서비스 30분, 대중교통 15분, 소방출동 5분

- 서비스 유형별 접근성 결과를 토대로 양호지역과 취약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행정리 수 및 인구 수 제시(비율 포함)
-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위계별(고·중·저)로 구분하여 분석
- (예: 보건의료시설 저차 보건진료소, 중차 보건소, 병의원, 고차 종합병원)
-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종합분석과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들의 특징 및 원인 설명(공간·지리적 특징, 도로교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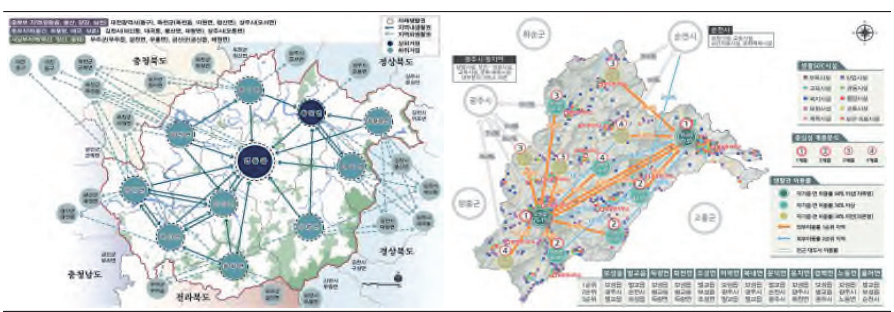
-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능이 필요한 지역과 수요가 높은 계층 등을 도출
-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현황 정리 : 취약한 서비스 분야, 접근성이 열악한 인구규모, 취약지역 분포 등

⑤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 이용목적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이용 패턴을 분석(서비스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내부 외부 이용 특성 파악)

❍ 설문, 워크숍, 시설 운영자 인터뷰 등의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생활서비스시설 이용률을 읍면별·시설별(보육·교육·복지·문화 등)·서비스 위계별(고·중·저)로 구분하여 산출
- 생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령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연령대별 생활서비스 이용 특징 추가 검토
- 통행패턴 결과(모바일 이동데이터 등)와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결과를 비교(읍면별 이동, 타 시군 이동)하여 생활권 형성 검토
- 모바일 이동데이터와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결과에서 타 시군 이동의 1순위가 다를 경우 통과지역 등 지역적 특성 검토
- 중심성지수와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결과를 종합하여 도면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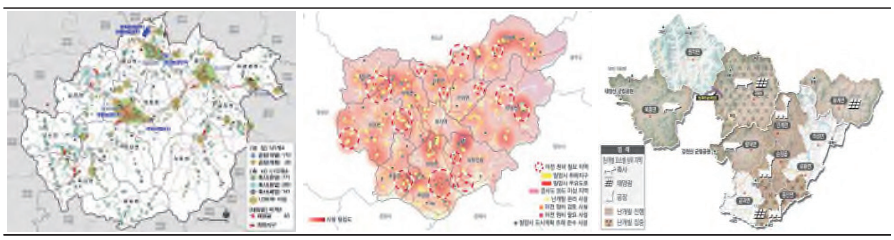
⑥ 생활서비스 중요도·만족도 조사

- 읍면별 생활서비스 만족도 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중점개선 분야(중요도高, 만족도低)를 서비스 위계(고·중·저)별로 분석하고, 중점개선 분야의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지역과 함께 제시
- 예: 저차서비스/생활편의, 중차서비스/교통기능, 고차서비스/교육기능
- 365생활권 측면에서 읍면별·기능별 보완·개선이 필요하거나 과잉된 서비스 등 지역의 특징 설명

3 토지이용 보전자원, 난개발 요소 발굴 등

○ 도시·군 기본·관리계획을 근거로 용도지역·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 등 현황, 최근 변화 추이와 특성 등을 작성하고, 비농업적 토지이용 수요,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계획 요소의 발굴을 위한 현황 제시

- 축사, 공장, 태양광설비 등 난개발 요소와 기타 농촌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소의 분포, 입지 등에 대한 정보 파악
- 난개발 요소에 대한 공간적 분포는 현재 진행중인 지역과 난개발이 집중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검토
- 공간적 분포 외에 실질적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민원 현황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역 도출



3)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 향후 해당 시군의 농촌공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요소와 그에 대한 분석·해석 내용 작성

- 목표인구, 주요산업 변화, 신규 개발사업착공, 인접지역의 개발·발전 등 시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요소를 조사·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총론적인 거시적 변화 보다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중심으로 기술
- STEEP 분석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목표연도인 2040년의 변화상 예측
- 인구(고령화·청년·다문화 등), 과소화, 친환경에너지, 전략·향토 산업 매출, 청년일자리, 농가소득 등

- 인접지역의 인구, 정책, 재정, 개발수요 등을 검토하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지역 외부로의 생활권이 형성되는 지역 또는 각종 개발로 생활권의 변화가 예상되는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 인접지역과 연계되는 광역 교통망, 인구변화, 주택단지, 문화·관광·여가·쇼핑 활동 수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개발수요 및 추진사업 등

-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통해 해당 시군의 거시적·지역적 대응방향 기술

4)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타 계획들의 현황과 농촌 공간구조, 생활서비스 등과 관련된 주요내용 작성

-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나타나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농촌 공간구조(생활권 설정 등), 서비스 공급·전달 추진방향 등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검토하고,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 연계·활용해야 할 사항 도출

- 상위계획은 농업·농촌 분야와 주요 분야별 상위계획(시도 종합발전계획 포함) 등 법정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상위계획의 방향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 관련되거나 연계된 내용 기술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에 대한 공통 키워드를 도출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참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공간발전구상, 생활권 설정 근거 및 내용, 읍면별 세부계획,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검토
- 공간발전 구상은 도심/부도심, 생활권중심/지역중심 등 공간거점과 주요 발전 축(주 개발축, 녹지축, 수변축 등)을 검토
- 생활권 설정 현황은 시군 종합발전계획,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서 제시한 생활권을 중첩하여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권역 도출
- 교육, 복지, 문화, 교통 등 11개 분야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검토
- 공간발전 방향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지역의 공간구조 진단(중심지역으로서의 기능, 중심지와 주변면 소재지 간 연계성 등)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사점과 계획 반영사항 기술

5)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지역주민, 공동체 등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IPA(중요도·만족도 분석), AHP 분석 기법 등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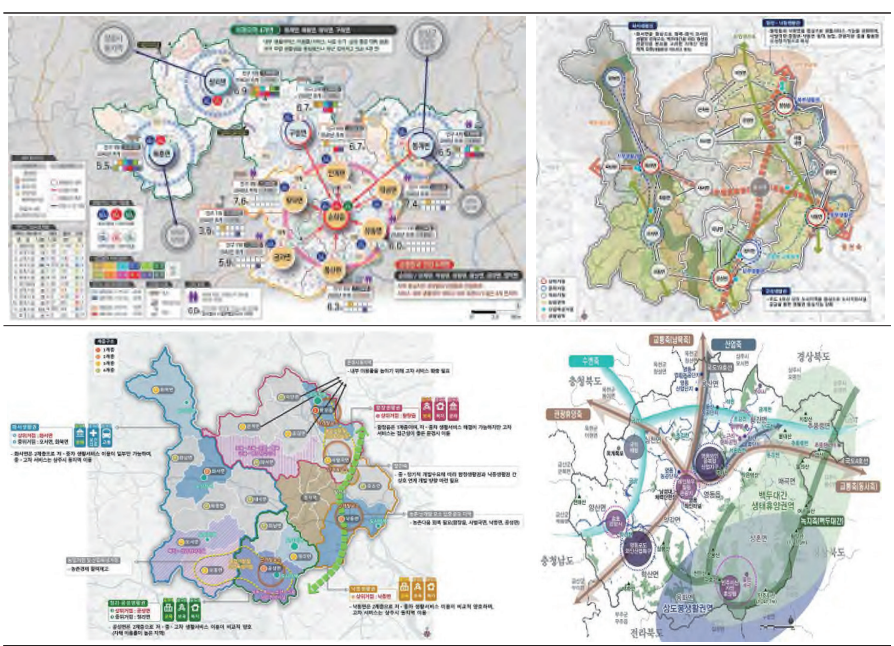
-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는 생활권별·부문별 문제점 및 정책수요 정리 → 대응전략 → 우선과제 도출로 연계되는 논리 체계 형성
- 정책수요 분석은 읍면별로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과제 도출
- (예)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우위유지영역 내 기능은 하위거점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영역 내 기능은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거점기능 강화

6)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농촌공간의 특성을 종합분석 후 생활권 및 정책과제 도출

- 생활권 도출 : 자연적인 지형, 교통망, 중심지간 네트워크 현황, 연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 도출
- 과제 도출 : 시군의 현 상황과 향후 여건변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공간의 시사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상위계획, 계층분석, 생활서비스 이용, 인구이동 등에 따라 나타난 각각의 권역을 활용 또는 중첩시켜 연계구조 도출하고, 기능별 거점 및 거점지구 등을 고려한 농촌공간구조상의 문제점 분석
- 예 : 농촌공간의 문제점 : 인구 불균형, 고차(중차) 서비스의 집중현상(자족·의존·부족), 접경지역의 거점기능 약화, 난개발 분포 등
-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농촌공간구상(비전 및 목표 등)을 고려한 논리적 연계 강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지역공동체활성화 측면에서 개선방향 제시
- 지역의 주요 현황 및 농촌공간의 특징을 표현하는 종합도면 작성



1) 기본방향 설정

○ 시군의 비전 및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작성

- 비전 : 해당 시군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공감, 공유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며, 실행가능성을 검토
- 목표 :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
- 추진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이 취하는 방향성 및 수단
- 추진과제 :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과제 정리

- 일반현황 및 여건,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위·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일반적 문구는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이 잘 표현된 비전 설정
- 비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주요 키워드 또는 핵심가치 등을 제시

- 농식품부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농촌정주여건개선, 농촌경제활력제고, 지역공동체활성화)를 고려하고, 비전과 추진전략을 논리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목표 제시

- 추진전략 하부에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를 제시하여 비전 목표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등으로 연계되는 논리체계 구축

2) 농촌공간 구상

○ 농촌생활권 및 농촌생활권간 연계방안, 용도별 공간 구획 등을 설정하고 시군의 전체 공간에 대한 발전 구상도 제시

- 기능별 축, 기능별 거점·권역, 농촌생활권, 생활권간의 연계구조, 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공간, 추진과제 등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통해 향후 변화시키고자 하는 농촌공간의 발전방향을 기술
- 농촌생활권을 제시하되, 앞서 종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활권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

- 기능별 축 : 지역 내 주요자원과 상위계획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적 형태로 연속 또는 연속될 잠재력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설정
- 예 : 지역발전축, 균형발전축, 서비스전달축, 교통축, 녹지축, 농촌다움 보전축, 농업생산축, 역사문화축, 경관축, 관광휴양축, 생활권연계축 등

- 기능별 거점 권역 : 유사한 기능이 집적되거나 미래 핵심공간 기능이 가능한 지역·자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정
- 예 : 농업, 산업, 물류, 관광, 역사문화, 생태환경, 교육, 농촌다움 보전, 농촌체험, 휴양힐링, 귀농귀촌, 도농교류 등

- 생활권 설정 방법 : 자연지리환경, 인문사회환경, 상위계획, 중심지 계층, 모바일 이동, 생활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프로세스 제시
- 생활권 설정 근거 : 생활권 설정 요소 도면 중첩 표현 등
- 생활권 설정(안)이 복수일 경우 생활권 설정(안)별 장단점 제시
- 현재의 정주체계와 계획 생활권을 비교하고 변화 내용을 설명하고, 생활권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능 및 역할 등을 명시

○ 생활권 연계를 위해 서비스전달체계 강화, 생활권별 균형발전도모, 인접 시군의 고차서비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연계사업 발굴 및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 시군 중심지 또는 생활권 중심지에서 상위거점~중위거점~하위거점~배후마을로 연계되는 고차(중차) 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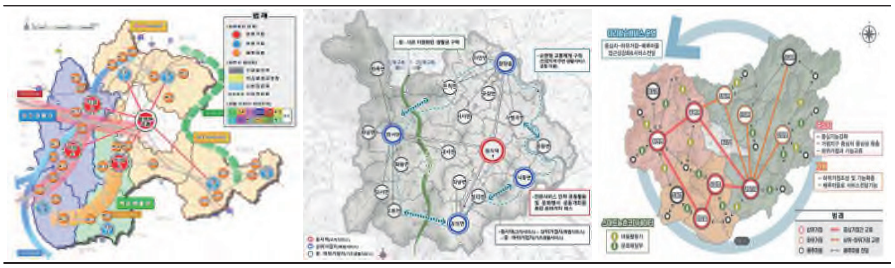
○ 생활권별 균형발전 도모 : 생활권 발전단계별(예: 도입·성숙발전) 협약 추진 및 연계방안 검토

○ 인접 시군의 고차서비스 활용 : 중심지와의 연계성이 어려울 경우 인접 시군의 상위거점과 기능적 연계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또한 생활권간 연계사업 발굴 및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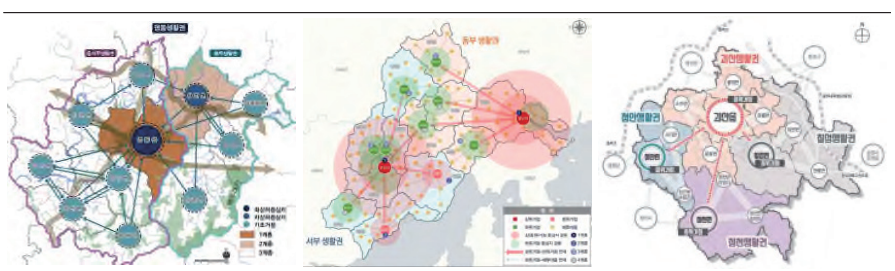
○ 연계사업 : 상위거점~중위거점, 중위거점~하위(기초)거점, 상위거점~하위(기초)거점간 연계체계를 제시하고, 거점간 상호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 거버넌스 : 생활권 내 활동가 등을 발굴하여 액션 그룹 조직화 등



- 농촌형 지구 : 농촌공간에서 발생하는 보전, 정비,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
- 예 : 농촌마을보호, 농촌경관, 농업유산, 농촌산업, 농촌문화,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자원순환, 농촌융복합, 농촌공간정비 등

- 생활권 내 상위·중위·하위 거점에 해당하는 읍면별 생활권 현황 요약
- 인구, 중심지 계층, 고차(중차)·저차 서비스 이용 지역 등
- 도면에 접경지역의 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이 나타나도록 인접 지역의 고차(중차) 서비스 거점 지역을 함께 표현



1) 생활권 발전방안

○ 농촌생활권별 발전방향, 목표, 전략, 과제 등을 제시하여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농촌생활권별 농촌공간 모습 작성

- 발전방향 : 기본구상 내용과 정책수요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생활권별로 추진할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 및 과제 작성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등 과제 추진방안 기술

○ 생활권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사항 및 정책과제 도출

○ 서비스 기능 유형별 공급현황, 이용상 문제점, 주민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 생활권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에 기반한 비전 목표 전략 체계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 제시

○ 단일생활권은 상위거점·중위거점·기초거점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 제시하고, 복수 생활권은 생활권별로 추진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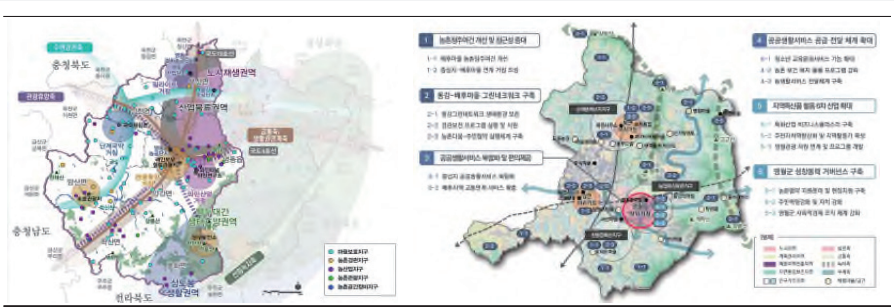
○ 주요 부문별 하드웨어와 및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시

○ 농촌협약 대상 외 연계사업 제시를 통해 생활권 발전방안의 실효성 제고

○ 상위거점과 연계되는 중하위 거점의 기능 확충(시설개선·확충) 방안과 생활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및 배후마을로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생활권이 복수일 경우 단계별 추진로드맵 제시

○ 생활권의 주요 현황 및 특징, 발전방향, 추진과제 등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기본구상도 작성



2) 우선 농촌생활권 선정

❍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생활권별 우선순위 설정

❍ 단일생활권일 경우에도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 등을 설정

❍ 설정방향 : 농촌협약 정책과제,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충족, 지역 내 불균형 격차 완화 등을 고려

❍ 설정기준 : 상위계획(정책부합성), 지역의 정체성(적절성), 자원 활용가능성(지역연계성), 주민수요(시급성), 지자체 추진의지 및 재원확보 가능성(실효성), 기 추진사업과의 연계성(지속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주민수요 부문은 시설 외에 프로그램 수요도 함께 검토

❍ 검토절차 : 주민수요, 전문가 자문, 농촌협약 관련 위원회 의견 수렴 등

❍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 설정기준을 고려한 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정량)하고 정책수요 및 의견수렴(정성) 등을 통해 우선순위 설정

1)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작성

- 구성된 거버넌스(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생활권별추진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 주체별(전담조직,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지역공동체 등) 기능과 역할 명시

○ 각 주체별 인력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계획 등 운영방안을 명시하고 주체간 기능적 연계방안 제시

○ 주체 : 농촌협약위원회(의사결정), 농촌협약협의회(주민거버넌스), 전담조직(행정조직), 행정협의회(행정거버넌스),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연계협업기관, 전문가 자문단, ○○생활권 농촌협약추진단, 주민협의회, 지역주민공동체(서비스전달) 등

○ 기초(시군)~광역(시도)~농식품부(중앙) 간 농촌협약 이행체계 고려

○ 지역사회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 참여 유도 방안과 실행주체 중 행정과 민간영역(도시재생 등)의 상호 연계협력 방안 등 제시

○ 자립체계 구축을 위한 주역주민 역량강화, 현장활동가·민간전문가 육성, 지역·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

2) 재정 투자·운용 계획

○ 재정규모 및 추계, 생활권별·부문별 투자계획, 재원별·단계별 투자계획

- 재정규모 최근 5년간 연도별 예·결산 현황을 제시하고, 재정규모 추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활용
- 시군에서 향후 20년간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이행하여 농촌생활권을 미래상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방안 제시
- 재원별 투자계획 작성 시 국고보조금과 민간 투자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

○ 년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여건 변화 분석

○ 필요시 유사 시 또는 군 지역 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의 재정여건 설명

○ 농촌협약 투자계획에 대한 총괄투자계획과 생활권별 부문별·단계별·재원별 투자계획 제시

3) 성과관리 계획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작성

- 기본구상에서 나온 목표나 주요 추진과제와 관련된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연도별 또는 5년마다 목표치를 설정

- 성과목표 달성 및 과제별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작성

- 목표별·부문별(인구사회, 생활환경, 농촌공간 등) 정량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제시(체크리스트, 관련부서 업무 협조체계, 중간지원조직 활용, 환류체계 등)

- 인구사회지표 : 인구(농촌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방문객), 가구, 농촌일자리, 소멸위험지수, 고령화, 귀농귀촌 등

- 생활환경지표 : 중심지 기능 계층 격차, 배후마을 서비스 접근성, 대중교통 공백마을 수, 중심지 서비스 거점지구 내 생활SOC 시설 수, 빈집수, 생활서비스 전달인력 확보, 시설 및 서비스 수혜자 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고용창출, 공동체조직, 사회적농업, 도농교류활동, 평생교육참여율, 주거환경만족도(고차(중차)·저차) 등

- 농촌공간지표 : 농촌형 지구 실적, 난개발 시설 수·면적, 농촌다움 보전 추진실적, 마을만들기 사업 수 등

○ 모니터링 : 농촌개발사업 예산분석 모니터링, 사업 실적관리, 시설물 사후관리, 전문인력 육성·관리, 홍보·마케팅의 정기·수시 모니터링, 부진지구 활성화 계획 등

○ 평가 : 주요지표 설정 및 평가(정량), 사후 만족도 조사(정성)

2.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시 요구되는 목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살펴보고,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세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제시

○ 농촌공간 전략계획 내용과 유사한 계획의 개요,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여건변화 전망 및 과제 부문은 제외하고 농촌생활권 기본구상, 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 계획, 성과관리 계획 부문을 중심으로 검토

○ 농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표 4-2]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목차

Ⅰ.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3.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2. 계획의 범위 4. 계획수립 경위 및 방법
Ⅱ.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1. 가용자원 현황 3. 관련계획 및 사업 검토	2. 공간구조 및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Ⅲ. 여건변화 전망 및 과제	1. 농촌생활권 여건 변화 검토 3.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2.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Ⅳ. 농촌생활권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3. 공간발전 구상도	2. 추진전략 및 과제 4. 사업 선정
Ⅴ. 사업계획	1. 종합사업계획도 3. 세부 사업계획	2. 사업 총괄표
Ⅵ. 집행 및 관리 계획	1. 집행계획	2. 관리계획
Ⅶ. 성과관리 계획	1.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2. 성과목표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1

1) 비전 및 목표

○ 농촌공간전략계획 상의 내용을 활용하여 시군의 비전과 목표 작성

○ 농촌공간 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구체성 고려

○ 생활권의 주요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과 연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필요시 통합목표와 거점별(상위·중간·기초)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 사례 : 비전

○ 경기 : (이천) 농촌다움의 중심, 살고싶은 생활환경 조성

○ 강원 : (원주) 사람이 찾아들어 더불어 생활하는 건강한 삶의 터전, (영월) 더불어사는 삶이 행복을 창조하는 일상+서부생활권

○ 충청 : (영동) 품격있고 활력있는 영동 중추생활권, (홍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재생 성공모델 갈산생활권, (괴산) 살기좋은 365 생활공감거점

○ 전라 : (임실) 누구나 살고싶은 교육도시 임실, (순창) 생활서비스·친환경·주민이 융복합된 이음과 맞춤의 순창읍생활권, (보성) 365 행복농촌 보성

○ 경상 : (상주) 365 어울누림 플랫폼, (김해) 행복지수를 더하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동부생활권, (밀양) 365일 행복한 영남의 중심지

※ 사례 : 3대 정책과제별 목표

○ 농촌정주여건 개선

○ 서비스 거점 구축, 쾌적하고 품격있는 일상생활권, 365 교육거점, 중추생활권 조성, 안정적 기초생활권 위상정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생활서비스 공·수급 여건 개선

○ 농촌경제활력 제고

○ 특화자원 활용 성장동력 강화, 일자리가 다채로운 경제생활권, 농업자원 활용 지역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농촌경제 활성화 및 다각화,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주민주도 향토특화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순환공동체 실현, 나누고 함께하는 소통생활권, 지속가능 농촌커뮤니티 육성, 지역사회 주도의 서비스 공급망 구축, 농촌경제 활력조직 육성, 중간지원조직 육성

2) 추진전략 및 과제

○ 농촌공간전략계획 상의 내용을 활용하여 시군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작성

○ 목표별 전략과 필요시 공간별(읍면별 또는 거점 위계별) 전략 제시

○ 거점별(상위·중간·기초)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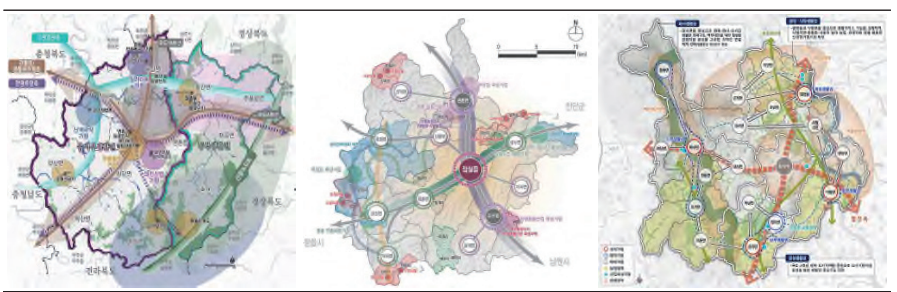
○ 생활서비스 실태 및 주민 수요 등에 근거해 시설 및 프로그램의 보완, 강화, 통합, 확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 주요 고려사항 : 거점별 기능 강화, 거점 간 연계 활성화,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생활권 거버넌스 강화 등

3) 공간발전 구상도

○ 공간발전 구도 설정시 중심지 거점시설 등은 점(點)으로, 교통축·녹지축·경관축 등은 선(線)으로, 집산지·전원주거지 등의 기능지역(용도별 농촌강간 구획)은 면(面)의 형태로 표현

○ 중심지 위계별(상위·중위·하위) 서비스시설 연계 등을 고려한 네트워크 체계를 고려하고, 365생활권 정책 취지에 기반한 공간발전 구상



4) 사업 선정

○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농촌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을 선정하여 제시

- 대상사업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사업으로 협약 체결시 패키지로 지원되는 사업(지방비 매칭 필요)
- 연계사업 : 농식품부 타 실국, 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 사업 선정 잘차 및 결과는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우선 선장하고, 농촌협약 대상사업과 병행·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 선정된 사업에 대한 개요(기간, 내용, 사업비, 대상지, 주체 등)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이 각 사업의 목적·취지와 사업시행지침 등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검토

- ❍ 거점별 기 추진사업을 검토하고, 목표~(현황 및 개선방향)~추진과제~사업선정으로 연계되는 논리체계 제시
- ❍ 사업선정 기준 : 문제점 개선 및 생활권 활성화 측면 고려하여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연계사업에 대한 기준 제시
- ❍ 문제점 개선 : 또는 을 통한 생활권 활성화, 생활 SOC 현황 및 접근성, 사업추진현황, IPA분석결과 등
- ❍ 생활권 활성화 : 목적 부합성, 지역정체성, 파급효과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 ❍ 연계사업은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실과 의견수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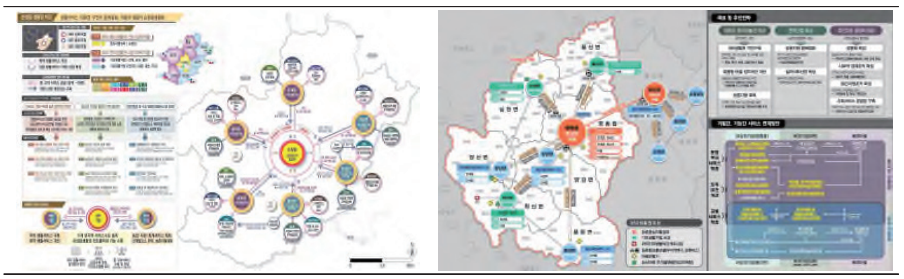
1) 종합사업계획도

○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농촌협약 대상·연계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계획도를 작성하고 읍면 간 기능 연계 방안 제시

○ 협약대상사업과 연계사업을 생활권 내 읍면지역에 주요 기능별로 표현

○ 읍면 간 기능 연계는 상위거점과 중위·기초거점과의 위계에 기반하여 기능 분담,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고려

○ 사업계획도의 명료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등의 모식도를 함께 표현



2) 사업 총괄표

○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과 과제별 투자계획 등 제시

※ 주요 사업내용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사업명(내역사업)	개소수(건수)	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비고
합계								
		계						
		계						

※ 과제별 투자계획

정책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사업명 (내역사업)	대상 지역 (읍면)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대상사업				연계사업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계										

○ 사업내용은 HW·SW·HuW로 구분하고, 필요시 서비스 종류(교육, 문화, 보육, 의료, 경관, 안전, 일자리 등) 제시

3) 세부 사업계획

○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연계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위치, 사업내용, 투자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기술

○ 사업계획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라 수정·변경 작성

○ 연계사업의 경우 '기타'항목에 사업자 선정 여부, 미선정 시 공모 응모계획 등을 작성

- ❍ 생활권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체계에서 사업(대상·연계)이 지니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명시
- ❍ 생활권 내 서비스 거점(상위·중간·기초)의 기능 확충, 기능 강화, 기능 보완 등 사업 추진을 통한 거점 위계별 지향점 구체화
- ❍ 주요 거점과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명확히 제시
- ❍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사업은 HW/SW/HuW별로 구분하여 제시
- ❍ 생활권 내 유사 시설과의 기능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 ❍ 사업내용 : 추진방향, 사업추진 로드맵, 연계 조직, 서비스 수혜 대상 등
- ❍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기 추진한 지역은 사업 보완방향 측면에서 작성
-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고, 대상 지역의 후보지를 거점(상위·중간·기초)별로 제시

1) 집행계획

○ 생활권활성화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설사업은 연차별 재원배분을 고려하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

○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 사업은 주민 역량의 단계적 성숙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

2) 관리계획

○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운영방안을 제시

- 지자체,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용역사, 공공기관 등 활성화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주체와 후속 사업별 기본계획과의 연속선상에서 역할·기능 등을 제시

○ 의결기구, 협의기구, 소통기구, 실행기구, 지원기구 등 기능별 추진기구의 구성, 역할과 기능, 세부 운영 규정 명시

○ 농촌협약 관련 조례 제정 등 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관련 조례 제·개정 : 통합지원조직·행정전담조직·시설물 운영관리 등

○ 통합지원조직 운영관리 : 농촌협약위원회·협의회, 농촌협약지원센터, 행정협의회 등 사업실행 주체별 세부 운영규정 등을 포함

○ 행정전담조직 운영관리 : 행정기구 설치조례

○ 시설물 운영관리 :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등

○ 필요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총칙, 시설물 운영관리, 운영관리 위탁, 협의회 등 구성·운영, 보칙)

○ 사업의 세부내용을 HW/SW로 구분하여 단계별 관리계획 제시

○ 통합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세부 이행방안과 자립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중요재산, 시설운영, 지역사회 역량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계획 제시

- 중요재산관리 : 시군의 중요재산관리에 대한 방향, 계획, 방침 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리방안 제시
- 운영관리 : 시군 중요재산 관리 추진조직과 농촌협약상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운영측면의 방식 제안
- 주민역량 진단,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역량증진 방안 제시

○ 시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의 활용 방안 검토

○ 운영관리 주체, 운영지원·협력 주체, 행정·관리 지원 등을 검토

○ 지역사회 역량 관리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주체 발굴, 운영 주체 육성, 전문성 강화 등 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제시

○ 지역 내 주민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협의체 간 네트워크 구축 검토

1)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생활권활성화계획 구상 및 세부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계획지표 제시

○ 성과지표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세분하여 설정하되, 성과목표 연도는 사업종료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지표설정(예) : 3대 정책과제 지표

○ 농촌정주환경 개선 : 유소년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문화서비스시설 이용률, 일상생활권 이동량 변화, 대중교통 공백마을 수, 생활서비스 전달주체 등

○ 농촌경제활력 제고 : 귀농귀촌인구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사업체 및 종사자수, 농촌 일자리 창출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공급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만족도, 사회적경제조직 수, 사회적농업(개소), 주민협약체결 건수 등

○ 지역특성 기반 지표설정(예) : 인구사회지표, 생활환경지표, 농촌공간지표

○ 인구사회지표 : 생산연령인구 비율, 유소년인구 비율, 지역공동체조직 변화 수, 사업체 수, 연간 관광객 수, 순인구 이동, 소멸위험지수 등

○ 생활환경지표 : 인구 100명당 서비스시설 수, 보육교육복지시설 비율 및 만족도, 대중교통 공백마을 수, 생활환경 및 서비스시설 만족도, 주요 생활SOC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률 및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배후마을 주민 만족도 등

○ 농촌공간지표 : 빈집 수, 노후주택 비율,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지구 수, 난개발시설 입지비율, 축산단지 집단화 농가 수, 농촌다움복원 사업 수 등

2) 성과목표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과정상 문제점 해결,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평가계획 제시

○ 각 지표에 대한 평가·측정 방법, 시기, 절차, 전후 비교내용, 평가·추진 주체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사업평가를 포함한 준공백서를 농식품부에 전자데이터로 제출

○ 생활권의 목표로 설정한 내용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고려

○ 예 : 인구사회지표, 생활환경지표, 농촌공간지표

○ 사업관리와 성과관리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사업관리는 기획(계획)단계, 집행(사업추진)단계, 성과 등으로 세분

○ 모니터링 추진체계 : 구성, 주체, 지원조직, 주기, 항목, 환류 시스템 명시

○ 평가체계 : 사전·중간·사후 평가, 자체·현장·심층 평가 등으로 세분

○ 환류체계 :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 우수지구 활성화 및 부진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고려

3. 농촌협약 연계사업

○ 농촌공간의 20년 단위 전략계획 수립 및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사업과 타 부처 사업 등 연계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 필요

- 농촌협약 대상 : 지역거점 조성사업, 지방이양사업, 기타 농촌정책국 사업

* 지역거점조성 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시군역량강화 등

* 지방이양 사업 :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다움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재능나눔,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등

* 기타 농촌정책국 사업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초주택개량사업, 농촌다원적자원 활용, 경관보전직불,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사회적농업활성화, 농촌공동체활성화, 귀농귀촌활성화 등

○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을 농촌협약의 3대 정책과제를 고려해 농촌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구분하여 검토

1) 농촌정주여건 개선

[표 4-3] 농촌협약 연계사업 (농촌정주여건 개선)

부처	사업 내용	재원
복지부	• 다함께 돌봄(돌봄센터, 학교 지자체 협업)	일반회계
	• 어린이집 확충(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일반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회계
문체부	• 문화시설 확충(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등)	균특회계
	• 문화예술향유 지원(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기금
	• 문화예술교육활성화(학교문화예술, 사회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일반회계
	• 지역문화진흥(지역문화역량강화, 생활문화 활성화)	일반회계
	• 꿈꾸는 예술터(리모델링, 사업기획 및 운영 자문, 콘텐츠 개발 등)	일반회계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문화로채움, 문화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일반회계
	• 국민문화활동(지역특화형프로그램, 생활속 문화활동 지원)	일반회계

부처	사업 내용	재원
	• 문화예술취약분야 지원(미술창작 전시공간,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봉사단) • 국민체육센터 건립(생활권형, 근린생활형,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등)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어르신, 취약계층, 여성 체육활동 지원 등)	문예기금 체육기금 균특회계 체육기금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확충(전용교실확충, 일반교실·특별교실 리모델링 등) •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일반회계 일반회계
여가부	• 청소년활동 지원(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일반회계 청소년기금 양성기금
환경부	• 영농폐기물 재활용(공동집하장 확충)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주택 및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 생태관광체험시설(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우수 생태관광지 기반시설)	환특회계 농특회계 환특회계 환특회계 환특회계
국토부	• 위험도로 개선(도로선형 개량) • 스마트 돌봄(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24시간 스마트 돌봄서비스)	교특회계 일반회계
행안부	• 자전거 인프라 구축(자건거도시 브랜드화,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 마을관리소(주민공동체 편의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일반회계
과기부	• 스마트빌리지 조성(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능형 경로당(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기반 구축 등)	정보통신기금
중기부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주차장 건립, 주차장 이용 보조 등) •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화재안전시설 개선, 안전점검 등)	소공기금 소공기금
해수부	• 어입인 삶의 질 향상(어촌생활돌봄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농특회계
농식품부	•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운영 지원	농특회계

1 보건복지부

○ 다함께 돌봄(일반회계) :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센터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부담 경감(센터설치 및 운영 지원)

- 학교/지자체 협업 : 학교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돌봄 정책 추진 지원

○ 어린이집 확충(일반회계)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회계)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2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등

○ 문화예술향유 지원(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신나는 예술여행 :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방방곡곡 문화공감 :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문화소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교육활성화(일반회계) : 문화예술 체험·학습·향유가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학교문화예술 :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회문화예술 : 토요문화학교 운영,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등
- 지역문화예술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 지역문화진흥(일반회계) : 지역문화거점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의 기반 마련

- 지역문화역량강화 : 지역문화 혁신브랜드 육성,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배치
- 생활문화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문화자원봉사 사회 확산 지원

○ 꿈꾸는 예술터 : 주민들이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조성

- 시설 리모델링, 사업기획·운영 자문, 지역 문화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 문화로 채움 : 전문강사에 의한 문화예술 분야(음악, 미술, 사진 등) 교육 지원
- 문화활동 지원 : 어르신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의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단체가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문화활동 지원(일반회계) : 사회 전반에 여가에 대한 인식 제고,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지원 : 각 지역 고유의 문화·지리적 특성과 유·무형의 콘텐츠를 특화하여 기획한 지역민·관광객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생활문화활동 모임 지원 및 직장인·유아동 등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 취약분야 지원(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취약분야 활동기반 조성

-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 국민체육센터 건립(국민체육진흥기금)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확충

-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학교일반형·산단복합형)

○ 체육진흥시설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공간 확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지방체육시설 조성,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 일반 국민 및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여성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등

3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일반회계) :온종일 돌봄정책(′18.4.4.)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공간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이용확대

- 전용교실 시설 확충, 일반교실 · 특별실 겸용 사용을 위한 리모델링 등 지원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일반회계) : 학교를 “제로에너지 · 친환경 그린스쿨+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을 결합한 융합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 학교 단열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열교환형 환기장치 설치

- 스마트 교실 :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수 · 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로 구축

- 학교시설 복합화 : 학교에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이외에는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

4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 지원(일반회계)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청소년프로그램(참여·활동·보호) 공모,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 (참여) 청소년 권익 개선,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활동) 성평등 의식 제고, 진로 역량 개발, 문화감수성 제고,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청소년육성기금) : 취약계층 청소년 및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역량 배양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양성평등 기금) : 육아, 돌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정책 도모 및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활동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돌봄공동제 지원)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및 공동돌봄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운영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시설, 지역모임 등 지역공동체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신규 운영

5 환경부

❍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환경개선특별회계) :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 농촌인구 고령화로 영농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마을단위로 농민들이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농어촌지역에 매립, 소각시설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환경개선 특별회계)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시설을 확충하여 자원재활용률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제고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 농어촌·단독주택 지역의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환경개선특별회계) :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거주민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약 34,000동),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약 10,000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약 4,000동)

○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환경개선특별회계) : 생태자원이 우수한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에 체험, 교육, 체류 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지역소득 증진 도모

-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 국립공원에 유형별 생태탐방원 조성·운영, 우수 생태관광지에 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6 국토교통부

○ 위험도로 개선(교통시설특별회계) : 도로 기하구조가 취약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 도모

○ 스마트 돌봄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 '21년 시범사업 추진(광주광역시 쌍촌 영구임대주택)

7 행정안전부

○ 자전거 인프라 구축(일반회계) :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추진

-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전거 정책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 자전거도로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전거도로 보차도 분리, 단절구간 연결, 요철 및 파손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 자전거도로의 안전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 마을관리소 :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

-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관리 등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빌리지 :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 개선

- 농어촌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계 지역

○ 지능형 경로당 :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하여 여가·복지 등의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

- (필수)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화상회의 기반 구축, (선택) 기능성 운동게임, 건강측정기기, 무인안내기, 지능형 안내시스템 등

9 중소기업벤처부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

- 전통시장 내 주차장 건립, 공공 및 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안전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위험요인 개선

- 화재알림시설 등 화재안전시설 개선, 노후전선정비, 안전점검 등

⑩ 해양수산부

○ 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및 시설 지원

- 어촌생활돌봄지원 : 사회 · 복지 서비스 기반이 약한 어촌지역 고령 · 취약 가구의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어촌생활돌봄 지원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하거나 탈의,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다목적 용도의 안전쉼터 조성

⑪ 농림축산식품부

○ 농번기 아이돌봄방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설치 ·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대상)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단체, (지원) 아이돌봄방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

2) 농촌경제 활력 제고

[표 4-4] 농촌협약 연계사업 (농촌경제활력 제고)

부처	사업 내용	재원
고용부	• 사회적기업 육성	균특회계
국토부	• 도시재생(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재기반형) • 지역수요맞춤 지원(주거+생활 SOC+일자리)	균특회계 일반회계
행안부	• 스마트타운(ICT 기반 서비스 구축) • 골목경제 회복(커뮤니티공간 조성, 골목디자인개선, 설비개선 등) • 지역자산화 지원(공간매입 자금 지원) •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지원 등)	
문체부	• 유휴공간 문화재생(년간 약 10개소) • 전통문화체험 지원(템플스테이, 전통문화체험시설 등)	균특회계 관광기금

부처	사업 내용	재원
	• 생활관광 활성화(현지살아보기, 현지 나들이) • 국내관광 역량강화(대표관광지 100선, 지역명사 문화여행, 열린관광지) • 국민여가캠핑장(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지원, 안전성 확보 등) • 지역특화 관광자원 선정(생태녹색관광, 산업관광, 레저스포츠관광, 걷기 여행길 활성화)	관광기금 관광기금 관광기금 관광기금
환경부	• 환경교육체험관(미활용 폐교 리모델링)	
중기부	•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 지역특구 운영(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적용) • 지역특화산업 육성(시군구 연고산업) • 소상공인 창업지원(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성공불 융자 지원) • 소상공인 성장지원(스마트슈퍼, 온라인 판로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등) • 시장경영혁신지원(특회시장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일반회계 일반회계 균특회계 소공기금 소공기금 소공기금
해수부	• 해양관광 육성(해양레저관광거점,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어촌활력기반 구축(유휴시설 활용 특화산업 육성, 어촌체험휴양마을,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등) • 어촌뉴딜 300(인프라 개선 및 특화개발사업 지원) • 귀어귀촌 활성화(도시민어촌유치 지원, 귀어학교 개설) •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어촌경관 개선, 지역특화사업 지원)	일반회계 농특회계 농특회계 농특회계
농진청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현장실증, 기술표준화, 매뉴얼화 등) •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등) • 치유형 농촌관광(교류치유, 휴식치유, 운동치유)	균특회계 균특회계 일반회계
산림청	• 산촌활성화(산촌공동체 활성화, 산림일지발전소, 신품종재배단지 등) • 산림교육치유 활성화(유아숲 체험원, 치유의 숲) • 청정임산물이용 증진(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상품화 지원, 6차산업화 등)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균특회계
문화재청	• 문화유산 활용 진흥(생생문화재, 문화유산방문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활성화, 무장애공간 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문화유산 방문학교, 체험교실, 테마문화재 학당,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회계 일반회계 문화재기금

1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균형발전특별회계) :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제공

* '22년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6만여 개 창출

2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 주거지지원형(10만㎡ 이하, 저층주거밀집지역), 일반근린형(0만~15만㎡, 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지역), 중심시가지형(20만㎡ 내외, 상업·상권지역), 경제기반형(50만㎡ 내외, 산업 및 지역경제 쇠퇴지역)

○ 지역수요맞춤지원 : 농산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 SOC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규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활력 도모

* (대상)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내용) 주거+생활SOC+일자리

3 행정안전부

○ 스마트타운 조성 : 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ICT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 ('19년) 청도군, 완도군, ('20년) 인제군, 서천군, 하동군, 고흥군, ('21년) 광주북구, 서귀포시, 의정부시, 성주군, 김해시

○ 골목경제 회복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피해가 집중된 지역골목경제의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 골목경제 인프라 구축

* 인프라 : 공동체 운영조직 마련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영업설비개선 지원 등

○ 지역자산화 지원 : 지역 내 방치된 유휴공간 등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건당 최대 10억 원의 융자 및 융자금리 일부(1~2.5%)에 대한 지자체 이차보전(6월), 맞춤형 컨설팅(8~12월), 성과공유 네트워크 참여(12월) 등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 (공간) 주거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공간 등 청년활동공간, (프로그램)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활동 등, (네트워크) 지역주민 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온·오프 홍보활동 등

4 문화체육관광부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문화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2014년 추진 후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년간 약 10개소 추진 중

○ 전통문화체험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찰, 유교문화시설 등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

- 템플스테이 지원 :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시설 및 운영 지원(인력운영, 수용태세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 유교문화시설(향교, 서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관광상품화 지원

○ 생활관광 활성화(관광진흥개발기금) : 새롭게 변화하는 여행 및 관광 트렌드와 소비자 유형을 고려하여,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콘텐츠 개발

- 현지 살아보기형 : 강진군, 대구광역시

- 현지 나들이형 : 강릉시, 부산광역시, 서천군, 하동군

○ 국내관광 역량강화(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내외 관광객 여행편의·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 관광 공동체 조성 등 국내관광의 질 전국적 상향 평준화

- 한국의 대표관광지 100선 선정 :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온라인 이벤트 등

-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 지역의 역사와 생생한 삶을 함께한 명사를 스토리텔러로 발굴하여, '인생담'과 '지역관광명소'를 접목시켜 지역특화관광콘텐츠로 육성

- 열린관광지 조성 : 이동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동성 제고를 위해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시설 개선 등 무장애 관광 플랫폼 구축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관광진흥개발기금) :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활성화

-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안전 캠핑 캠페인 및 교육,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등

❍ 지역특화 관광자원 선정(관광진흥개발기금) :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생태녹색관광 : 코로나 시대에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후관광시설 재생

- 산업관광 : 지역의 특화 산업, 기업체, 산업시설 등의 산업자원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

- 레저스포츠 관광 :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관광객에게 레저스포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걷기여행길 활성화 : 지역의 매력적인 걷기여행길과 대표 관광자원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지역 특화 관광상품으로 육성

5 환경부

❍ 환경교육체험관 :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

* '21년 시범사업 추진(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

6 중소기업벤처부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일반회계) :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공간지원, 콘텐츠지원, 시장조사·권리화)

○ 지역특구 운영(일반회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초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신청 → 지역 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 → 지역특구 지정 · 공고(58개 법률, 128개 특례)

* '04년 특구 지정제도 도입 후 2021년 현재 198개 특구 지정·운영 중

○ 지역특화산업 육성(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기업에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혁신성장 도모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시도 주력산업에서 소외받는 시군구 영세기업의 사업화 및 애로기술 해소지원을 통해 낙후지역의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창업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생활분야 틈새시장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성공불 융자 지원

* 성공불 융자 : 해외 자원개발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제도(실패 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소상공인성장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 지원

- 스마트 슈퍼 :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 제고

- 기타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등

○ 시장경영혁신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 특화시장 육성 : 지역선도시장(지역특성과 개성이 우수한 시장 발굴), 문화관광형시장(지역의 자원과 연계해 문화체험·관광이 복합된 테마형 관광시장)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 핵심상권 등에 각 부처 및 민간 등의 정책수단을 집중하여 쇼핑+육아+지역민 생활·편의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청년몰 조성

7 해양수산부

○ 해양관광 육성(일반회계) :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 해양 관광, 레저·스포츠, 국민 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특화된 지역 거점 조성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 해양관광 인프라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단위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지원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해양레저 축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육, 청소년 해양체험교육 등

○ 어촌활력기반 구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촌산업 융복합 및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소득 증대 및 지역활력 도모

- 어촌유휴시설 활용 어촌특화산업육성 지원 : H/W와 어촌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의 S/W간 융합·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어촌 유휴공동시설을 활용, 어촌특화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자생력 도모를 위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무장 채용 지원, 마을 역량강화, 바다해설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 문객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국가지정어업 유산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어촌뉴딜 3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 및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관광활성화 등 도모

* '22년까지 300개소를 선정하고 사업 종료 후 3년간 전문가 자문단 지원을 통해 지속성 확보

○ 귀어귀촌활성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따라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지원

- 도시민어촌유치 지원 :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귀어귀촌 추진 및 지자체의 귀어·귀촌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 귀어학교 개설 :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귀어·귀촌인 기술교육(어선어업·양식 등)을 위해 귀어학교 개설 지원

○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 어촌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에 기여

* (대상) 어촌지역에 있는 시설 중 최소 2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나,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

8 농촌진흥청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전략작목 중심의 연구기반(인프라)구축 및 종합적인 기술지원으로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농산업 활성화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 개발된 기술 중 현장실증, 기술표준화, 매뉴얼화 등을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여 소득증대로 연결할 수 있는 현장 활용기술 개발

○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균형발전특별회계) : 체계적인 농산물가공창업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 농업인 가공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이용 가공시설 설치(가공 창버교육, 시제품 개발·컨설팅 등)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제품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 기타 :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 시범과제, 전통식문화계승 활동 지원 등

○ 치유형 농촌관광 : 농촌 자원,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교류 등을 통해 도시와는 다른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치유 지원

* (대상) 치유프로그램에 적합한 환경·자원을 보유한 농촌 마을 (모델) 교류치유, 휴식치유, 운동치유 등

9 산림청

○ 산촌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산촌에 안정적 정착 유도

- 산촌공동체 활성화(컨설팅),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시설정비 및 설치, 체험시설 지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 등

○ 산림교육치유 활성화(일반회계) : 국민의 산림교육·문화·휴양·치유 향유기회 확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유아숲 체험원 조성('22년까지 1,000개소), 치유의 숲 조성('22년까지 75개소)

○ 청정임산물이용 증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임산물의 가공·유통시설 현대화·규모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촉진 활성화

- 임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등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균형발전특별회계) : 국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한 산림휴양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자연휴양림 조성(산림욕장 포함), 숲속 야영장 조성

⑩ 문화재청

○ 문화유산 활용 진흥(일반회계) :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를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재 활용도 제고

- 생생문화재 :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을 제외한 문화재(산성, 근대건축, 폐사지 등)를 대상으로 하는 활용

- 기타 :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무장애공간 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일반회계) : 실감형 기술을 적용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 및 온오프라인 보급으로 국민 향유기반 확대

-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자연유산, 무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문화재보호기금) : 지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함양

- 지역문화유산 프로그램 지원 : 문화유산 방문학교, 문화유산 체험교실, 테마문화재 학당, 청소년 문화유산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

3) 지역 공동체 활성화

[표 4-5] 농촌협약 연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처	사업 내용	재원
행안부	• 마을공방 육성(지역문제 해소 및 활력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 청년공동체 활성화(청년 정착 및 활동 지원)	
문체부	• 관광두레(PD 활동지원, 주민사업체 지원, 홍보마케팅 등 활동지원) •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역 내 단체 및 기관들의 협력 및 연계 지원)	관광기금 관광기금
환경부	• 꿈꾸는 환경학교(활동비 지원,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환특회계
농식품부	•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농업환경 개선·보전 활동 참여 유도) • 농촌관광협의체(협의체 중심의 상향식 농촌관광사업체계 구축)	농특회계 농특회계

1 행정안전부

❍ 마을공방 육성 :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 활동을 지원

- 피해주민 마음 치유, 취약계층 물품 나눔과 돌봄,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방역 활동 등

❍ 청년공동체 활성화 :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 지원

- 팀당 과업 수행비 지원, 멘토 및 전문가 자문, 권역별 연계망 형성 지원 등

* (남원) 시골살이 프로그램 운영, (익산) 청년 네트워크 및 문화프로그램

❍ 지역공동체일자리(균특)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두레 조성(관광진흥개발기금) : 지역관광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지역 진단과 역량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식음숙박, 관광)을 개발하고 상품화

- 관광두레 PD 활동지원, 주민사업체 지원, 홍보마케팅 등 활동지원

-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 지역 내에서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 관련 업계, 협회, 주민과의 협력 및 연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 지역관광 현안의 해결과 발전을 지원

  * (경기) 고양시, (충북)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충남) 보령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강진군, (경북) 경주시, (경남) 김해시, 통영시

3 환경부

❍ 꿈꾸는 환경학교 지정·운영(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을 배양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꿈꾸는 환경학교 및 환경동아리 활동비 지원, 교육 및 운영 관련 컨설팅, 교사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환경 교과 운영학교 대상 환경실(야외 포함) 조성비, 물품 및 교구 구입비 지원 등

  * 20년 꿈꾸는 환경학교 21개교(중·고교), 환경동아리 120개교(초·중·고교)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농업환경보전 의식 개선 및 관련 활동 실천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의 농업환경 개선·보전 활동 참여 유도

- 개인활동 : 토양(적정양분 투입, 외부양분 투입 감축, 토양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생태(농약사용 저감), 대기(온실가스 감축, 축산악취 저감)

- 공동활동 : 용수(농업용수 수질개선, 양분유출 방지 등), 생활(농촌비점 발생 최소화), 생태(농업생태계 보호), 경관(농촌경관 개선), 유산(농업유산 보전)

❍ 농촌관광협의체 :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자체,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상향식 농촌관광 사업체계 구축

- 농업유산, 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농식품부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과 밀접한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함

❍ 지역 주도하에 상향식 계획수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책주체의 이원화, 농촌의 난개발, 마을사업의 단발성 사업화, 배후마을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가 ′19년 전국 1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농촌의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요한 공간계획 수립, 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연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관련된 정책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시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검토하여 세부 작성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에서 제시한 기본구상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연계사업을 검토함

❍ 전북은 ′20년 시범지구로 2개소(임실군, 순창군), ′21년 대상사업으로 3개소(김제시, 진안군, 무주군)가 선정되었으며, ′22년 대상사업으로 7개소(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가 준비 중임

❍ ′20년 공모에 선정되어 ′21년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구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21년 전북에서 공모사업에 탈락한 지구의 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함

- 농촌공간 전략계획 :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계획의 기본방향, 농촌생활권 발전계획, 투자 및 관리운영 계획 부문의 과제 도출

-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 농촌생활권 기본구상, 사업계획, 이행관리 및 성관리 계획 부문의 과제 도출

○ 전략계획과 생활권활성화계획에서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21년 11월 변경된 농촌협약 가이드라인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부문별 세부 대응방안을 제시함

- 농촌공간 전략계획 : 개획의 개요(배경 및 목적, 범위, 성격 및 체계, 경위 및 방법),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일반현황, 농촌공간구조 분석, 대내외 연건변화, 상위·관련계획 검토,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기본구상(방향설정, 농촌공간 구상), 생활권발전계획(생활권 발전방안, 우선 농촌생활권 설정), 거버넌스 구축 및 투자관리 계획(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재정 투자·운용 계획, 성과관리 계획)

-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 농촌생활권 기본구상(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공간발전 구상도, 사업선정), 사업계획(종합사업계획도, 사업총괄표, 세부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 계획, 성과관리 계획(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성과목표 모니터링 및 평가)

○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실천력과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촌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협약 정책 취지와 부합되는 타 부처의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제시함

- 농촌정주여건 개선 : 복지부(다함께 돌봄 등), 문체부(지역문화진흥 등),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등) 등 11개 부처, 34개 사업

- 농촌경제활력 제고 : 국토부(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중기부(시장경영혁신지원 등), 산림청(청정임산물이용 증진 등) 등 9개 부처, 31개 사업

- 지역공동체 활성화 : 행안부(청년공동체활성화 등), 문체부(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등), 환경부(꿈꾸는 환경학교 등) 등 4개 부처, 7개 사업

2. 정책제언

-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계획수립과 공모를 준비중인 시군의 시간적 부담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농촌공간전략계획을 선정한 후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원화가 검토되어야 함

- 농촌협약을 계획서 작성시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대상사업을 농식품부의 농촌정책국 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전국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기존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을 추가로 제시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 내용 중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촌재생뉴딜 등의 사업이 농촌협약 대상사업 또는 농촌협약 연계사업 등으로 시군 간 혼재되어 있어 ′22년 대상지구 공모에 준비중인 시군에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시 기초생활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하드웨어는 중심지로부터 각각 500m, 300m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시설물 입지의 경직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계획을 준비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해년도 예산 집행을 고려함에 따라 계획수립 초기에 집중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어 계획수립 단계별로 컨설팅을 추진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지구의 계획수립 과정부터 공모,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경험을 ′22년 공모를 준비중인 시군과 공유하는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해야 함

-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배후마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또는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배점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REFERENCE

국토연구원. (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 Brief.

기획재정부. (2018~2021).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송미령, 성주인 & 심재헌. (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 거버넌스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원섭. (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2018). 자치분권종합계획(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 거버넌스 연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10.9.).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경기도 이천시. (2021). 이천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강원도 원주시. (2021). 원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강원도 영월군. (2021). 영월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충청북도 영동군. (2021). 영동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충청북도 괴산군. (2021). 괴산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충청남도 홍성군. (2021). 홍성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전라북도 임실군. (2021). 임실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전라북도 순창군. (2021). 순창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전라남도 보성군. (2021). 보성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경상북도 상주시. (2021). 상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경상남도 김해시. (2021). 김해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경상남도 밀양시. (2021). 밀양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정책연구 2022-04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안 연구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1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71-1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3520
9 788966 123711
ISBN 978-89-6612-371-1